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선정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2023. 5. 30.



민주연구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차례

CONTENTS

I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총괄 요약표	001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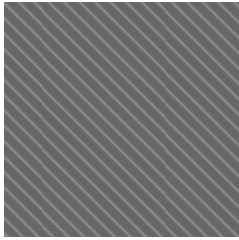
II	분야별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009
----	--------------------	-----

1. 가계부채·금융	: 과중한계채무자, 자영업자	11
2. 주거·부동산	: 무주택자, 실수요자	14
3. 중소기업		17
4. 소상공인		20
5. 노동·고용 ❶	: 특수고용노동자	23
6. 노동·고용 ❷	: 문화콘텐츠창작자	27
7. 노동·고용 ❸	: 돌봄노동자	31

부록1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전문	035
-----	---------------------------------------	-----

- [붙임1-1]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2023.1.12. 현재)
[붙임1-2] 당대표 신년 기자회견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2023.2.27. 현재)
[붙임2]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 신청 현황(총 39명)

부록2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언론보도 현황	087
-----	---------------------------	-----



일려두기

- ❖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는 2023년 3월 8일부터 4월 26일까지 총 8차에 걸쳐 진행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발제·토론 결과를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정리한 것으로 2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됨
 - 우선 매회 토론회(2~8차) 발제·토론자가 제안한 내용과 ‘책임의원 정책간담회(2~8차)’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을 ‘언론브리핑 보도자료(2~8차)’로 정리하여 발표·배포함
 - 다음으로 언론브리핑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7개 분야별 정책·입법과제를 중심으로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으로 구성하는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평가회의(구성: 정태호 민주연구원장,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39명 책임의원 등)에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선정하여 정리함
 - 이후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당지도부에 전달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계획임
-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됨.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공동 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

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자로,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추진하는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으로 함께 참여하였음

- ❖ 1장은 7개 분야별로 정책과 입법과제를 요약하여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총괄 표」로 정리함. ‘2장’과 ‘부록1’의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전문(全文)’을 보면 보다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음
- ❖ 2장은 △가계부채, △주거·부동산,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고용(❶ 특수고용노동자, ❷ 문화콘텐츠창작자 ❸ 돌봄노동자) 등 7개 분야별로 [1] 현황 및 윤석열 정부 정책의 한계, [2] 정책입법과제로 나눠 정리함. ‘부록1’의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전문(全文)’을 보면 보다 상세한 내용 알 수 있음
- ❖ 부록은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에 대한 2~8차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전문(全文)’과 언론보도 현황을 수록하고, 2023년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 총괄 요약표와 ‘과제별 책임의원’ 39명의 명단을 소개함
-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관련 자료 자세히 보기
 - ❶ 연속토론회 자료집(1~ 8차) & 언론브리핑 보도자료(2~8차) 보기 : <https://url.kr/2t7j4c>
 - ❷ 연속토론회 유튜브 동영상(1~ 8차) 보기 : <https://url.kr/5wl6qa>

P A R T

I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총괄 요약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총괄 요약표

분야	정책·입법과제	비고
[1] 한계 채무자 자영업자 가계부채 위기 극복 대책	<p>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8대 정책입법과제</p> <p>❶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의 보루로 DSR 규제 원칙의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p> <p>❷ '만기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20~30년 '장기모기지론'(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p> <p>❸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기준 공개 입법 추진(가산금리 구성요소 공개법), 금리인상 등 담합 여부 감독</p> <p>✓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2022.7.13.)</p> <p>✓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2022.7.13.)</p> <p>❹ 자영업자들의 폐업·파산을 막기 위해 배드뱅크(새출발기금) 및 파산·회생 등 채무조정 이용 지원, 재창업 및 업종·직업전환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p> <p>✓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2021.9.15.)</p> <p>✓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정부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28개 법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9개 법률, 여성가족위원회 소관 5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14개 법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35개 법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1개 법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24개 법률, 교육위원회 소관 4개 법률,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국회미래연구원법, 군인사법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박주민의원 대표발의)(2021.11.7.)</p> <p>❺ 재기지원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을 위해 우선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하고 향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추진(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화)</p> <p>❻ 부채규모 큰 자영업자나 450만 다중 채무자 지원 대책 : ▲ 대환대출을 통한 채무변제시기 연장 대상 ▲ 개인 워크아웃을 통한 소규모 원금과 이자감면 대상 ▲ 법원의 파산·회생을 통한 대규모 채무조정 대상을 구분하여 채무재조정 지원 대책 마련</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조례 입법 (경기도 성남, 고양, 수원, 용인, 부천 등 대도시 우선 설치)</p>

분야	정책·입법과제	비고
	<p>⑦ 전문 회생법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확대,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연계 시스템 구축</p> <p>⑧ 괴롭히기 추심 금지,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의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 금융 관련 인권제도 정비</p> <p>✓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2020.8.10.)</p> <p>✓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정부)(2022.12.14.)</p>	
[2] 무주택자 실수요자 주거 불안정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대책	<p>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공공임대 및 부담가능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5대 정책입법과제</p> <p>① 선구제·후환수의 피해 구제 절차 입법 추진 : 보증금 피해규모 파악, 선구제, 후환수 등</p> <p>② 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채무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입법 추진</p> <p>③ 전세사기, 깡통주택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예방 입법 추진</p> <p>✓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2022.9.19.)</p> <p>✓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의원 대표발의)(2020.6.19.)</p> <p>④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회수 등 집단적 권리구제 특별법(전세사기·깡통전세 구제법) 제정 추진</p> <p>✓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2023.3.30.)</p> <p>✓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2023.5.25.)</p> <p>⑤ 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 추진</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대안반영폐기</p> <p>✓ 본회의 통과 (2023.5.25.)</p>
[3] 중소기업의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및	<p>3고(高)와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6대 정책입법과제</p> <p>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단체나 협회 차원의 ‘단체협상권’ 부여하는 입법 추진</p> <p>② 새로운 불공정행위 유형 대응 위해 이미 발의된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관련 법안 신속한 처리</p> <p>✓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2020.7.3.)</p> <p>✓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2020.8.3.)</p> <p>✓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2020.7.3.)</p> <p>✓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2021.2.8.)(2022.7.20.)</p>	<p>✓ 법안 추진 (김경만 의원실)</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분야	정책·입법과제	비고
경쟁력 강화 대책	<p>③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공정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 행정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 활동 강화</p> <p>④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p> <p>✓ 서영교 의원안(2023.4.25.), 박주민 의원안(2023.4.7.), 양정숙 의원안(2023.1.27.), 윤영덕 의원안(2022.11.11.), 오기형 의원안(2022.11.2.)</p> <p>⑤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p> <p>✓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2022.11.10.)</p> <p>✓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강병원의원 대표발의, 2021.11.29.)</p> <p>⑥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래자동차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p> <p>✓ 전기차 전환에 따른 자동차 부품업체 종사자 10만8천여 명과 정비업체 종사자 10만여 명의 업종·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 상담, 전환비용 지원 등의 사업 추진</p>	<p>✓ 민주연구원 추진</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민주연구원 추진</p>
[4] 소상공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대책	<p>독과점 플랫폼으로부터 입점업체, 소비자, 언론 보호를 위한 4대 정책입법과제</p> <p>① 독과점 플랫폼기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실태 조사(디지털 시장경쟁 조사) 추진</p> <p>②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입법 추진</p> <p>✓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2023.2.16.)</p> <p>✓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 (2023.2.16.)</p> <p>③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 추진</p> <p>✓ 서영교 의원안(2023.4.25.), 박주민 의원안(2023.4.7.), 양정숙 의원안(2023.1.27.), 윤영덕 의원안(2022.11.11.), 오기형 의원안(2022.11.2.)</p> <p>④ 소상공인 단체의 단체교섭권 보장을 위한 법률(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개정 추진</p> <p>✓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 (2020.7.3.)</p> <p>✓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2020.7.3.)</p>	<p>✓ 민주연구원 실태분석 진행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분야	정책·입법과제	비고
[5] 특고 노동자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p>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입법과제</p> <p>① '특고노동자'에 대한 정부와 국회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 추진 건인</p> <p>② '특고노동자' 오분류(임금노동자를 특고노동자로 잘못 분류) 문제의 신속한 해결 위해 노동위원회 산하 '(가칭)특수고용노동자 분류 심사위원회' 설치 등 입법 추진</p> <p>③ 노사 자율교섭 보장을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근로자, 사용자 개념 확대) 추진</p> <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비례) 대표발의)(2022.7.18.)</p> <p>✓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2022.7.18.)</p> <p>④ '특고노동자' 산재·고용보험 적용을 14개 업종에서 '특고노동자' 업종 전반으로 확대 추진</p> <p>⑤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지원</p>	<p>✓ 법안 추진 (이학영 의원실)</p> <p>✓ 대안반영폐기</p> <p>✓ 법사위 계류중</p>
[6] 문화 콘텐츠 창작자의 불공행위 폐해 위기 극복 대책	<p>문화산업 불공정 근절과 혁신성장을 위한 5대 정책입법과제</p> <p>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입법 추진</p> <p>✓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유정주의원 대표발의)(2020.12.30.)</p> <p>✓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위원장 대안)(2023.3.29.)</p> <p>② 공정위에 '문화콘텐츠과' 신설, 공정위와 문체부 간 불공정 문제를 다루는 협력 행정체계 구축</p> <p>③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해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 조속한 입법 추진</p> <p>✓ 온라인 플랫폼시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2023.2.16.)</p> <p>✓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동주의원 대표발의)(2023.2.16.)</p> <p>④ 자치단체에 불공정행위 조사와 분쟁조정 행정권한 부여하는 법령상 위임 규정 마련</p> <p>⑤ 영화산업에서 시작된 '공정경쟁협약'이 문화산업 전체 업종별로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p>	<p>✓ 대안반영폐기</p> <p>✓ 법사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p>✓ 상임위 계류중</p>

분야	정책·입법과제	비고
[7] 돌봄노동자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p>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돌봄노동자 고용안전과 처우개선을 위한 5대 정책입법과제</p> <p>❶ 국가와 지자체는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돌봄 정책의 중심에 두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핵심적 과제임을 확인</p> <p>❷ 돌봄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 강화 촉구 및 점검</p> <p>❸ 돌봄노동자 처우를 악화시키는 정책과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중단 촉구</p> <p>❹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책임원칙을 명확히 하고 돌봄 노동자 단체들과 처우 개선에 관한 내용을 단체교섭 하도록 추진</p> <p>❺ 돌봄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또는 (가칭)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입법 추진</p>	<p>✓ 법안 추진 (최혜영 의원실)</p>

P A R T

II

분야별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
1. 가계부채금융 : 과중한채무자, 자영업자
 2. 주거·부동산 : 무주택자, 실수요자
 3. 중소기업
 4. 소상공인
 5. 노동·고용① : 특수고용노동자
 6. 노동·고용② : 문화콘텐츠창작자
 7. 노동·고용③ : 돌봄노동자

[1] 가계부채·금융 분야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대책

책임의원 : 박주민(좌장)·민병덕(토론)·신동근·양경숙·오기형·이동주 의원

1 가계부채의 심각성 및 윤석열 정부 대책의 한계

- 1) 한국은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3%로 100% 넘는 4개국 중 하나

[참고] 국제결제은행(BIS) 2022년 3분기 '신용 통계(Credit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3%로 세계 43개국 중 3위(스위스 128.9%, 호주 113.6%, 한국 105.3%, 캐나다 103.2%)

- 2)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정부부채(국가부채) 비율보다 높고, 상승폭도 더 큼
- 3) 주요 선진국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00% 넘을 때 한국은 54% 정도로 양호한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G20 평균이 약 60%인 반면 한국은 100% 상회

- 4) 윤석열 정부 부자·대기업 감세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난방비 등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물가' 인상 방치

[참고] 2023년 1월 관리 품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5.0%, 관리물가 상승률은 5.8%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5.2% 높아진 이유임. 특히 전기료, 도시가스는 전체 관리물가 상승분의 약 80%를 차지(출처: 현대경제연구원, 2023.2.28.)

- 5) 공공임대, 지역상권 활성화(지역화폐), 공공의료 등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 예산 대폭 감축
- 6) 다주택자 대출규제 해제 등 부채를 통한 경기부양, 가계부채 관리정책 포기
- 7) 결론적으로 한국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가계부채 리스크 지속적으로 확대

2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8대 정책입법과제

- 1)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의 보루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 원칙 일관성 있게 유지
- 2) ‘만기 일시상환’주택담보대출을 20~30년‘장기모기지론(안심전환대출)’으로 전환
- 3) 시중은행들의 가산금리 기준 공개, 금리인상 등 담합 여부 감독 강화
- 4) 자영업자의 돌려막기(빚을 갚기 위해 빚을 내는 다중채무) 폐업·파산을 막기 위해, 배드뱅크(새출발기금) 및 파산·회생 등 채무조정 이용 지원, 재창업 및 업종·직업전환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 원스톱 지원
- 5) 재기지원 원스톱 지원 위해 우선 전국 광역자치단체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향후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 상담센터 전국화). 자영업자가 자주 이용하는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상담과 채무조정, 복지, 창업지원 등 ‘원스톱 지원 복합행정 시스템’ 구축
- 6) 부채규모 큰 자영업자나 빚 돌려막기 하고 있는 450만 다중 금융기관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통해 자력으로 채무변제시기를 연장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소규모 원금과 이자감면 ▲법원의 파산·회생을 통한 대규모 채무조정 등 대상자를 구분하여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채무재조정 적극 지원

- 7) 과중·한계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신속한 파산·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전문 회생법원을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확대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연계한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 8) 채무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괴롭히기 추심 금지 ▲채무자 보호 위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하는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 금융관련 인권제도 정비

[2] 주거·부동산 분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대책

책임의원 : 전혜숙(좌장)·조오섭(토론)·박상혁·서동용·윤준병·이수진(지역)·홍기원 의원

1

주거·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및 윤석열 정부 대책의 한계

- 1) ‘깡통주택, 전세사기’ 피해 임대주택이 2만 채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
- 2) ‘깡통전세 우려(전세가율 80% 이상) 공동주택이 10집 중 4집, 집값 하락세 지속과 최근 1~2년 전세계약 만료일 도래로 피해 증가 예상
- 3) 전세사기 피해는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많고(72%),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가장 심각(65%)
- 4) 전세 피해자들에게는 체납한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 5)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세대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상환 압박까지 받고 있어 사면초가 상태
- 6) 윤석열 정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 거의 전무
- 7) 윤석열 정부, 고가주택 매입 대출 허용, DSR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 답습

- 8) 윤석열 정부, 공공임대 예산 5조 7천억 삭감, 분양가상한제도 강남, 서초, 용산 등으로 제한

2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공공임대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5대 정책입법과제

1) 국회 차원의 전세사기, 갭통주택 피해구제와 예방 대책의 추진

(1) 선구제·후환수의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 입법 추진

- ①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차원의 피해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별 피해세대, 국세·지방세 등 선순위채권, 회수하지 못하는 보증금 피해규모 등 파악하고,
- ② 자산관리공사 등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LH 등이 협업하여 위와 같은 피해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채권을 (감정)평가·매입하여 피해 임차인들을 선구제하고,
- ③ 자산관리공사, LH 등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2~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매각함으로써 보증금채권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절차가 필요함

(2) 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채무의 신속한 채무조정 입법 추진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파산·회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

(3) 전세사기, 갭통주택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예방 입법 추진

공인중개사의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설명의무 외에 신규주택의 가격, 앞선 임대차보증금의 존재,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설명 의무화 입법 필요

[참고] 2023.4.18., 공인중개사의 확정일자 및 국세·지방세 체납규모 사전 설명을 의무화하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의3(임대차 중개 시의 설명의무) 신설, 2023.10.19.일부터 시행

(4)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등 집단적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차주택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조세채권 등) 등 여러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불가하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집단적 권리 구제가 필요

2) 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 정책 추진
무주택자, 주택 실수요자들은 임대주택 또는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원하고 있으므로 공공임대 확대,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부담가능주택’ 공급 등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 주거·부동산 정책 견인

[3] 중소기업 분야

중소기업의 3고(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에 위기 극복 대책

책임의원 : 정태호(좌장)·김경만(토론)·김교흥·김한정·이원욱·이용선·이장섭 의원

1 3고(高)와 산업구조 재편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정부의 방치 행정

- 1) 소부장 중소기업은 고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료비가 크게 상승한 반면, 납품받는 대기업들은 납품대금을 올려주지 않아 생존 위기 봉착
- 2)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빚에 의존하고 있으나 회생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지원이나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3) 독과점 지위를 구축한 플랫폼 오픈마켓들의 과도한 중개 - 광고 - 배송 - 물류 - 결제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기 점점 어려워짐
- 4)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가맹점·대리점 본사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소기업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도 증가
- 5) 탄소중립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10만8천여 명의 종사자와 10만여 명의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들은 생존 위기 직면
- 6)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업종·직업전환 등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무시하고 급속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 부품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업체 위기 방관

- 7) 「납품대금 연동제법(상생협력법)」통과에도 불구하고 쌍방 합의 시 납품대금 연동제의 예외규정으로 인한 공정한 납품거래 실현 의문
- 8)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책이 필요하나 윤석열 정부는 소부장 중소기업의 스마트팩토리 예산 대폭 삭감
- 9) 윤석열 정부,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및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율규제만 강조, 중소상공인의 어려움 가중

2

중소기업의 3고(高)와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6대 정책입법과제

- 1) 중소기업들이 개별 기업차원이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단체 차원에서 대기업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 추진

[참고]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상대방 대기업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대방 대기업에 성실교섭 의무도 부여하고 있음(일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2 제12항).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 등을 촉진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본사, 부품중소기업, 소비자 사이에 3:3:3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단체협상 전통이 있기 때문임. 독일도 중소기업단체들이 대기업과 공동교섭을 위한 행위에는 담합행위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들은 물론 심지어 화물자동차 기사단체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담합행위로 제재하려고 하고 있음
- 2)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기업인 가맹점, 대리점들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피해에 대응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점검 활동 강화. 현재 새로운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어 있는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등 관련 법안 신속 처리

중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여론화하고 단체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왔던 ‘더불어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 활동 더욱 강화

- 3) 철강, 플라스틱, 종이 등 소부장 기업의 원재료 공급을 독과점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원재료 가격을 크게 인상하고 있는지,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조립완성품 제조업체들과 건설회사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감독행정을 하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 활동 강화

- 4) 독과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자사상품 우대행위, 입점업체 상품 차별행위 등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를 위한 대응을 국회차원에서 논의 하고,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온플법)」 입법 추진
- 5) 전기차 등 미래자동차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 추진
- 6) 전기차 전환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미래자동차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하고,

자동차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업체 종사자 10만8천여 명과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 10만여 명의 업종전환,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과 상담, 전환비용 지원 등을 위한 사업 등 추진

[4] 소상공인 분야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피해 위기 극복 대책

책임의원 : 서영교(좌장)·이동주(토론)·김경만·김주영·민병덕·박주만·윤영덕 의원

1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 및 윤석열 정부 자율규제 정책의 한계

- 1) 온라인 플랫폼(오픈마켓, 배달앱 등)이 전 산업분야로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소비자의 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 더욱 심화
- 2)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피해 사례 증가
- 3) 독과점 플랫폼기업이 지배하는 승자독식 시장이 급격히 진행. 입점업체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 전가, 자사 상품 노출 순위 등 우대하고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 만연
- 4)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가맹점·대리점 본사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소기업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도 증가
- 5) 온라인 포털 플랫폼은 언론지형 등에도 광범위한 시장지배력 행사. 뉴스 독자 대부분 포털을 통해 언론기사 접속하고 있어 언론의 포털에 대한 종속성 심화
- 6)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인 단체들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시장불균형의 대표적인 영역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불균형’ 꼽음

- 7)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자율규제 원칙만을 내세우며 플랫폼 입점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노출랭킹 조작, 광고·판매 장려금 강요 등 각종 불공정행위 방치
- 8)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나 자율상생이 가능하려면 입점업체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 대등한 거래조건 교섭이 가능해야 함

2

독과점 플랫폼으로부터 입점업체, 소비자, 언론 보호를 위한 4대 정책입법과제

- 1) 독과점 플랫폼기업(네카쿠배 ;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에 대한 더불어민 주당 차원의 실태조사 추진

미국 하원의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와 같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 독과점 플랫폼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의 실태 파악과 대안 제시 근거 마련

- 2) 세계적으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안티스티어링(anti-steering)’ 등 적어도 ‘4대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독과점 플랫폼 규제 입법 추진

[참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사 가맹점인 카카오프랜차이즈에 대한 배차 몰아주기(자사우대),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등의 결제, 배송, 물류, 식자재배급 끼워팔기, 다른 오픈마켓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요구(최혜대우 요구), 안티스티어링(플랫폼 이용업체가 소비자에게 다른 플랫폼 또는 대체 결제수단 권유를 금지하는 것) 등은 한국의 독과점 플랫폼에서도 가파(GAFA)를 그대로 모방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과점 지위남용 행위의 대표적 사례임

- 3)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자율상생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 공정에 관한 법률안(약칭, 온플법)」 입법 추진

- 4) 소상공인단체의 단체교섭을 통한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 활성화가 필요함.
소상공인의 플랫폼 중개거래 조건 개선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
단체의 단체교섭권과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단체 간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 추진

[참고]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점주단체 구성권이 명문화돼 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음. 더욱이 「대리점법」에는 단체교섭권에 대한 명문 규정도 없음

[참고]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기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담합의 예외로 인정(동법 제11조의2제1항).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담합 부당공동행위 거래조건 개선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가받으면 가능하나(동법 제40조제2항) 인가 받은 사례가 없음. 독일은 중기의 공동행 위에는 담합 적용제외. 일본은 협동조합 활동에는 담합 적용 제외

[5] 노동고용① 특수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책임의원 : 이학영(좌장)·이수진(비례)(토론)·어기구·최인호 의원

1 ‘특수’로 가려진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들의 생존위기

- 1) ‘특고노동자’는 최소 165만 명 이상으로 추정.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특고노동자’ 형태의 고용 비대하고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 직종 지속적 증가 예상
- 2) 이를 방지하면 불안정 고용상태의 ‘특고노동자’가 급속하게 확대될 위기, 새로운 유형의 ‘특수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대책 수립 필요
- 3) ‘특고노동자’는 40~50대 취업자가 대다수로 플랫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배달, 택배, 물류, 돌봄 등 필수 노동에 종사, 우리 경제활동의 중추를 책임지고 있음
- 4) ‘특고노동자’는 산재·고용보험 등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에서도 사각지대에 있고,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산재 피해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 5) 한국에서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기술진보 등의 영향도 있지만 주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매우 큼
- 6) 대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로 ‘특수고용’을 적극 활용해 왔고, 소규모의 작은 사업장에서도 그 활용 빈도가 매우 높음

- 7) ‘특고노동자’는 작업조건이나 보수조건에 대한 교섭을 하지 못하여 낮은 수수료에 ‘근로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8) 윤석열 정부 들어 ‘특고노동자’등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 거의 전무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의미 있는 정책들도 중단되거나 후퇴될 가능성이 큼
[참고]14개 직종까지 확대된 산재보험은 추가 직종 발굴에 대한 계획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임
- 9) 이미 체결된 ‘사회적 협약’의 이행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 낸 ‘안전운임제’는 거의 파기되고 있는 상황
- 10) ‘특고노동자’는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이고, 법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자동차 기사들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담합행위를 적용하여 형사처벌의 논리로 맞서고 있음

2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정책입법과제

- 1) ‘특고노동자’의 다양한 형태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함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 실태조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태조사마저 외면하고 있음.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정부가 계속 외면한다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특고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민주당이 견인해야 함

- 2) 사실은 ‘임금근로자’인데 ‘특고노동자’로 계약이 잘못 체결되어 3.3%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오분류’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산하에 ‘(가칭)특수고용노동자 분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특고노동자’ 분

류 작업을 통해 오분류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 추진

[참고1] 매년 노동자임에도 잘못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인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까지 족히 3~4년은 걸리고 언제든 지 부당하고 내지 거래거절의 상황에 있는 ‘특고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임

- 3) 고용노동부는 오분류 문제를 법원의 판결에만 맡기지 말고 **대법원 판례상 노동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단되는 56개 정도의 업종으로 소분류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친 행정해석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야 함

[참고3] 법원이 특고노동자에 대해 근기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2021.7. 대법원이 재할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판결한 사례 ▲ 2022.2. 서울고등법원이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부당하고 구제를 판결한 사례 ▲ 2022.4. 대법원이 물류센터 모바일 서포터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부당하고 구제를 판결한 사례 ▲2022.6. 서울 행정법원이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사용자인 택배사에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판결한 사례 ▲2022.7. 서울행정법원이 코웨이 코디(방문점검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판결한 사례 등

- 4) **플랫폼종사자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플랫폼기업과 직접 단체교섭을 통해 거래·작업조건을 개선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 추진**

[참고1]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음. 택배 기사나 방문점검원 등도 그러한 사례임.

[참고2] 현재 이러한 법원의 판례 추세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 본회의 통과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한다면 앞서 살펴본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5) **현재 14개 업종의 ‘특고노동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산재·고용보험을 ‘특고노동자’ 업종 전반으로 확대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입법 추진**

- 6) ‘특고노동자’의 단체협상권 인정 여부를 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법적 교섭이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문체부, 중기부 등 범정부 협력행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특고노동자’업종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직접 지원하는 활동 추진

[6] 노동고용② 문화콘텐츠창작자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피해 위기 극복 대책

책임의원 : 홍익표(좌장)·유정주(토론)·김승원·소병훈 의원

1

세계를 주도한 한국의 문화산업, 그러나 문화콘텐츠 창작자는 생존위기

- 1) ‘문화콘텐츠산업’은 2021년 기준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를 기록하는 한국의 대표적 고성장 산업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의「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음악, 영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2021년 기준 137조5,080억 원으로 2017~2021년 사이 연평균 5.0% 성장. 수출액도 2021년 기준 124억 5,290만 달러도 2017~2021년 사이 연평균 9.0% 성장함.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산업 2022년 결산 및 2023년 전망 세미나」자료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7위를 차지함

- 2)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 분야는 창작자의 꿈을 실현할 선망의 산업이자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꿈의 영역이 되고 있음

[참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청년 종사자(40대 미만) 비중은 78.3%로 타 업종 평균 33.9%인 것에 비해 2.3배 청년 비중이 높다. 고용·취업 유발계수 또한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음(출처: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023.4.10.)

- 3) 그러나 ‘문화콘텐츠산업’은 프리랜서(창작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영세사업자 비중이 매우 높고, 대기업 중심의 플랫폼(유통) 의존도가 높아 불공정행위가 심각한

상태인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의「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콘텐츠기업은 단 13%에 불과하고 10인 미만 사업체가 92%를 차지하고 있음

- 4) 최저임금 수준 미만의 낮은 보수와 각종 불공정행위로 청년 창작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고, 불공정의 벽을 건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음
- 5) “갑질”형 불공정행위는 문화산업에서도 만연해 있고, 사실상 “공짜”로 창작물을 취득하는 사례 빈번함. ‘문화콘텐츠산업’이 독과점 플랫폼에 종속화 되면서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피해는 문화산업에서도 심각한 문제임
- 6) 불공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청년 창작자들이 문화산업을 떠나가고 있음. 창작자들이 대거 이탈하면 문화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
- 7) 국가적 차원에서 콘텐츠 진흥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중요한 과제이므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

2

문화콘텐츠산업 불공정 근절과 혁신성장을 위한 5대 정책입법과제

- 1)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견인해 나갈 것임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행위가 콘텐츠 창작자의 생존에 미치는 심각성과 이를 방지할 경우 문화산업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

- 2)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문화콘텐츠 거래 불공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문화콘텐츠과’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불공정 문제를 다루는 협력행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전인해 나갈 것임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문체부가 적극 행정으로 ‘문화산업 10대 불공정행위’를 조사하여 공정위에 보내더라도 공정위 내에 문화콘텐츠 거래의 불공정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인 부서가 없으면 입법 목적이 실현되기 어려움

- 3) 문화산업의 경우에도 자리 잡고 있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 추진

문화콘텐츠 창작자들은 플랫폼기업이나 그 계열 기획사가 정하는 거래조건에 따라 문화 창작물들을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플랫폼기업이 창작자들과 문화 기획사(CP) 사이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음.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비단 문화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나,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문화산업에 미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도 개선해 나갈 것임

- 4) 영화와 방송, 웹툰 등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애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조사와 분쟁조정에 관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근거 마련 추진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같이 문화산업 ‘적극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산업 불공정 실태조사나 분쟁조정 등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위임 규정 마련 추진

- 5) 더불어민주당은 영화산업에서 시작된 산업·업종 단위의 ‘공정경쟁협약’이 방송, 웹툰, 게임, 음악, 공연 등 문화산업 전체 업종별로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영화산업에서 이루어진 ‘공정경쟁협약’이 문화산업 전반에 체결되어 문화산업 종사자와 창작자들이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 비례한 공정한 보수와 작업조건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활동을 할 것임

[참고] 「공정거래법」은 산업별로 ‘공정경쟁협약’을 통해 산업 내 종사자들 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관계에 관한 ‘집단적 공정거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영화산업은 ‘국제시장’ 영화 제작 때부터 ‘공정경쟁협약’을 통하여 스태프들의 최저보수, 작업시간의 한도, 식사제공 등 종사자들의 작업조건과 거래조건을 정하고 있음. ‘공정경쟁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영화인신문고」는 「대체적 분쟁조정제도(ADR)」를 활용하고 있음

[7] 노동고용③ 돌봄노동자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책임의원 : 남인순(좌장)·최혜영(토론)·권인숙·서영석 의원

1 돌봄노동의 중요성과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 1)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에서 국가·사회적 돌봄으로 전환이 세계적 추세로 돌봄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로 한정된 협회의 돌봄노동자 규모는 2011년 71.7만 명에서 2021년 110만 명으로 최근 10여 년간 큰 폭으로 증가. 향후에도 지속적 증가 예상
 [참고] 돌봄노동자의 규모는 돌봄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짐. 2020년 12월에 정부는「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서 필수노동자 중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규모를 108.7만 발표함. 이 수치는 공식부문만 포함한 것으로, 비공식부문인 간병인, 가사서비스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13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임
 [참고] 통계청 통계개발원의「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보건·복지·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돌봄 부문 일자리는 최근 10여 년간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문으로 현재 224.5만 명이 돌봄 부문에 종사하고 있음
- 3) 돌봄은 상당부분 민간시장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으며, 돌봄 일자리의 질은 향상되지 않음. ‘돌봄노동자’들의 상시적인 고용불안, 불안정 저임금의 열악한 처우가 돌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음

- 4) 돌봄노동자들은 대부분 종속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교통비, 식대, 이동시간(일 51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음
- 5)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인프라 확충’ 대신 돌봄,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하며 사실상 복지 민영화 추진
- 6) 돌봄 수요자 입장에서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 및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해결 되어야 함

2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돌봄노동자 고용안정·처우개선을 위한 5대 정책입법과제

- 1)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돌봄 정책의 중심에 두고,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핵심적 과제임을 확인함
- 2) 돌봄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돌봄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촉구하고 점검
- 3)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 등 돌봄노동자 처우를 악화시키는 정책과 사실상의 사회서비스원 해체 시도 중단 촉구, 국회차원에서 이러한 돌봄서비스 퇴행조치에 대해서는 책임 추궁할 것임
- 4) 돌봄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의 핵심을 이루고 있음. 돌봄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원칙과 마찬가지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원칙을 명확히 해야 함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러한 돌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원칙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돌봄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별로 돌봄노동자 단체들과 단체교섭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근로기준법 준수 등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교섭하도록 추진

- 5)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과 같이 (가칭)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또는 돌봄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것임

「사회복지사법」과 같은 원칙과 가이드라인, 처우개선위원회에 더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돌봄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적용과 근로감독 강화의 내용을 담는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것임. [참고] 2018년과 2021년, 201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부록 1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언론브리핑 보도자료
전문(全文)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 Tel 02-2630-0150 /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010-4222-3925 /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김인아 보좌관(박주민 의원실) 010-3646-0626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2차) 금융·가계부채 분야

-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3.15.(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책임의원, 민병덕·박주민·양경숙·정태호·오기형 국회의원 참석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총 8회)’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붙임1 참조)’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공동 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붙임2 참조)’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음
-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3월 6일 박주민, 민병덕, 김성주, 신동근, 오기형, 양경숙 의원 등이 참여한 ‘책임의원 정책간담회(금융 분과)’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였음
- 오늘은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금융·가계부채〉 분야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가계부채 심각성과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을 진행했음

- 더불어민주당 을지기는민생실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갈 것임. 이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가계부채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가계부채의 심각성

- 1) 한국은 세계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넘는 4개국 중 하나
[참고] 국제결제은행(BIS) 2022년 3분기 ‘신용 통계(Credit statistics)’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3%로 세계 43개국 중 3위(스위스 128.9%, 호주113.6%, 한국 105.3%, 캐나다103.2%)** / 국제금융협회(IIF) 2022년 4분기 ‘세계 부채 모니터 (Global Debt 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4분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정치는 102.8%로 여전히 100%를 상회 /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2023.3.6.) 전세 보증금을 포함한 국내 가계부채는 2022년 3000조원에 육박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OECD 국가 중 1위
- 2) 주요 선진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정부부채(국가부채) 비율보다 낮으나, 한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정부부채(국가부채) 비율보다 높고 가계부채 비율 상승폭도 정부부채 비율 상승폭보다 큼
[참고] 2019년 95.0%였던 국내 가계부채 비율은 2020년 103.0%로 8%포인트 높아짐. 이 기간 정부부채 비율은 42.1%에서 48.7%로 6.6%포인트 상승함.(자료: 국제결제은행(BIS), 기재부)
- 3) 주요 국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00% 넘을 때 한국은 54% 정도로 양호한 반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경우 G20 평균이 약 60%인 반면 한국은 100%를 상회
- 4) 결론적으로 한국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가계부채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윤석열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 한계

- 1) 다른 국가들이 에너지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통해 고물가로 고통 받는 서민을 지원할 때,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 감세**(종부세, 법인세 등)와 재정건전성을 내세우며 **난방비 등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 관리물가 인상을 방치하고 있음**
[참고] 관리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는 458개 품목 중 정부가 가격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40개 품목의 물가를 말하며, 소비자물가지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로 높아 이들 품목 가격 불안정이 바로 소비자물가 불안으로 이어지게 됨. 2023년 1월 관리 품목을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5.0%, 관리물가 상승률은 5.8%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5.2% 높아진 이유임. 특히 전기료, 도시가스는 전체 관리물가 상승분의 약 80%를 차지(출처: 현대경제연구원, 고물가 현상 언제까지 지속되나?, 2023.2.28.)
- 2) 공공임대, 지역상권 활성화(지역화폐), 공공의료 등 취약계층과 중산층 지원예산 대폭 감축
- 3) 다주택자 대출규제 해제 등 부채를 통한 경기부양에 나서며 가계부채 관리정책 포기

3.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하는 가계부채 대책

- 1) 최근 정부가 '부동산 대출규제 정상화'를 이유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의 예외 범위를 늘려가고 있음. 가계부채 관리의 최후의 보루로 DSR 규제 원칙의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함
- 2) 주택담보대출을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갚다가 만기에 원금을 전부 일시상환하는 만기 일시상환(Balloon Mortgage) 형에서 **20~30년 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갚는 장기모기지론, 즉 안심전환대출로 전환 필요함**
- 3) 기준금리 인상에 편승하여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확대 적용하여 폭리 취하는 것 막기 위해
 - 가산금리 기준 공개하고 은행의 독과점 지위를 남용한 금리인상 등 담합 여부에 대해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함

- 4) 폐업을 고민하는 자영업자들이 여기저기 빚을 끌어들이다 폐업·파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 배드뱅크(새출발기금) 및 파산·회생 등 채무조정 이용 지원, 재창업 및 업종·직업 전환 등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원스톱 지원
 - 이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금융복지상담센터 설치(우선 광역자치단체부터 시작, 향후 금융복지상담센터 전국화)하고 자영업자가 자주 이용하는 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하여 상담과 채무조정, 복지, 창업지원 등 원스톱 지원 복합행정 시스템 구축 필요함
- 5) 부채규모 큰 자영업자나 빚 돌려막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450만 다중 금융기관 채무자 등에 대해서는
 - 대환대출을 통해 자력으로 채무변제시기를 연장할 대상자와
 - 개인워크아웃을 통한 소규모 원금과 이자감면 대상자와
 - 법원의 파산·회생을 통한 대규모 채무조정 대상자들을 구분하여
 - 채무자의 상태에 맞는 채무재조정 적극 지원 필요함
- 6) 과중·한계채무자에 대한 법원의 파산·회생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부산, 수원에 설치한 전문 회생법원을 대전, 대구, 부산, 광주로 확대하고 금융복지상담센터 등과 연계한 신속처리 시스템 구축 필요함
- 7) 금리 인상으로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 시기에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 괴롭히기 추심 금지하고
 - 채무자 보호하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하는
 -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등 금융관련 인권제도를 정비해야 함



보도자료

2023.3.22.(수) 16:00 이후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 Tel 02-2630-0150 /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010-4222-3925 /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김인아 보좌관(박주민 의원실) 010-3646-0626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3차) 주거·부동산 분야

-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3.22.(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책임의원, 박주민·윤준병·전혜숙·조오섭 국회의원 참석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총 8회)’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붙임1 참조)’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공동 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붙임2 참조)’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3월 13일 박주민, 박상혁, 윤준병 의원 등이 참여한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주거·부동산 분과)’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 오늘은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주거·부동산〉 분야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정과 부동산 혼란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주거·부동산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을 진행했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기는민생실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거·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거·부동산 문제의 심각성

- 1) 갭투기로 수백 채의 임대주택을 사들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깡통주택, 전세사기’ 피해 임대주택이 급증세이며 2만 채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참고1] KBS, [단독] ‘1조 8천억’ 전세 사기 폭탄 터진다…올해 역대 최대 추정(2023.3.10.) : 전세 사기 조직과 얽힌 악성 임대인 176명이 소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2만 6천여 채에 달하며, ‘깡통전세’ 사기 규모는 2023년 1조 8천5백억, 2024년 7천 7백억 원으로 추정됨

[참고2]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악성 임대인의 보증사고 규모는 4,382억원, 보유 주택은 2,055채로 전체의 37%를 차지함

[참고3] 박상혁의원실·한국도시연구소, 2022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의 과제 (2022.9.)

- 2)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깡통전세 우려’공동주택이 10집 중 4집으로, 집값 하락세 지속과 최근 1~2년 전세계약 만료일 도래로 피해 증가가 예상된다.

[참고] MBC, [단독]실거래가 전수조사 "10집 중 4집 '깡통전세' 우려"(2023.3.14.) : MBC가 최근 공동주택 실거래 94만 건을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깡통전세(전세가율 100% 이상)은 전국 공동주택 약 6천 단지, 전체 9.3%(10집 중 1집), 깡통전세 우려(전세가율 80% 이상)는 전국 공동주택 2만4천여 단지, 전체 38%(10집 중 4집)로 나타남

- 3) 전세사기 피해는 2030대 청년층이 가장 많고,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추가 보완책이 필요하다.

[참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9월말부터 2023년 2월초까지 피해 상담 건수 중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65%, 청년층인 20·30대의 피해 사례가 72%임(20대 이하 20%, 30대 52%, 40대 17%)

4) 전세 피해자들에게는 체납한 선순위 조세채권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다. 임대사업자가 수백 채의 임대주택에 종합부동산세 등의 국세체납까지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개별적으로 경매 등에 나설 경우 먼저 나선 임차인 거주 임대주택에서 국세를 전부 환수해 먼저 나선 임차인이 희생되는 모순의 늪에 빠져 있다.

5) 결론적으로 해당 임차인의 희생절차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전세대출 채무부담을 줄여 주어야 하는데, 전세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지급한 임차세대는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세대출 상환 압박까지 받고 있어 사면초가 상태다. 더구나 희망을 찾지 못한 임차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2.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대책의 한계

1) 윤석열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으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2023.2.2.)'과 '전세사기 지원 추가 대책(2023.3.10.)'등을 발표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고 반발하며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현재 피해를 보고 있는 2만 세대 이상의 임차인에 대한 법적 불안 해소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2) 부동산 버블이 꺼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들은 빚내서 집사는 것을 꺼리고 당분간 안정적인 '임대주택' 또는 소득 대비 '부담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공급을 원하고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실수요자의 요구는 외면하고 고가주택 매입 대출 허용, DSR 등 소득대비 적정 대출규모 규제 등을 완화하며 ‘빚내서 집사라’는 과거 보수 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 3) 또한 공공임대 5조 7천억 예산을 삭감하여 서민들을 위한 안정적인 주거 공급을 축소하고, 장기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에게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는 핵심 제도의 하나인 분양가상한제도를 서민과 중산층이 내집 마련이 어려운 강남, 서초, 용산 등 고가주택 공급지역으로만 제한하고 있다.
- 4) 결론적으로 윤석열 정부에서는 ‘깡통주택,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미봉책, 예방책만 이것저것 나열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채무조정 지원 행정은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생각도 못하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조차도 임차인 피해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회수가능 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기관이 매입하여 임차인들을 선구제하고 그 뒤에 2~3년의 시간을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지고 일괄경매, 파산 등의 방법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구제대책이 필요하다.

3.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하는 주거·부동산 대책

1) 국회 차원의 전세사기, 깡통주택 피해구제와 예방 대책의 추진

(1) 선구제 후환수의 피해구제 절차 입법 추진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먼저 국토부와 지자체 차원의 피해조사를 통해 임대사업자별 피해세대, 국세·지방세 등 선순위채권, 회수하지 못하는 보증금 피해규모 등을 파악해야 하고,

자산관리공사 등의 전문 채권관리 공공기관과 LH 등이 협업하여 위와 같은 피해상황을 반영한 가격으로 보증금채권을 (감정)평가하여 매입하여 피해 임차인들을 선구제하고,

그 후에 자산관리공사, LH 등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2~3년에 걸쳐 경매, 공매, 파산, 우선매수권 등을 통해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로 매각함으로써 보증금채권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2) 피해 임차인의 전세대출채무의 신속한 채무조정

전세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냈으나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를 당한 경우 임차인은 전세대출 반환 압박까지 받아 사면초가 상태에 빠져 있다. 보증금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전세대출채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파산·회생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

(3) 전세사기, 강통주택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 예방 입법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중개를 할 때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 현황 설명의무가 있는데, 여기에 신규주택의 가격이나 선순위 국세의 체납규모, 앞선 임대차보증금의 존재,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등에 대한 정보도 설명하도록 하는 예방대책도 필요하다.

(4)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등 집단적 권리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

최근 성행하는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는 대부분 임차주택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조세채권 등) 등 여러 채권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임차인의 개별적 권리 행사만으로는 보증금 회수가 불가하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집단적 권리 구제가 필요하다.

2) 공공임대주택과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부담가능한 분양주택의 공급 확대 추진

무주택자 등 주택의 실수요자들은 임대주택 또는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using)’ 공급을 원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염두에 둔 공공임대 확대,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부담가능한 주택 공급 등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의 주거·부동산 정책을 견인해 가겠다.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 Tel 02-2630-0150 /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010-4222-3925 /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김인아 보좌관(박주민 의원실) 010-3646-0626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

(4차) 중소기업 분야

- 중소기업의 3고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3.29.(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책임의원, 김경만·이용빈·이용선·정태호 국회의원 참석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총 8회)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붙임1 참조)’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공동 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달·추진하는 ‘과제별 책임의원(#붙임2 참조)’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오늘은 네 번째로 <중소기업> 분야 ‘중소기업의 3고(高)와 디지털·에너지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 재편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문제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의원들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을 진행했다.
-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3월 20일 박주민, 이용선 의원 등이 참여한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중소기업 분과)’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기는민생실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중소기업’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중소기업 문제의 심각성 - 3고(高)와 산업구조 재편의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1)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B2B)들은 고환율,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료비가 크게 상승한 반면, 소재·부품을 납품받는 대기업들은 납품대금을 올려주지 않아 대부분이 적자로 돌아설 정도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 2) 소부장 산업은 중소기업이 산업 전체의 47% 비중을 차지하고, 전자,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 수출 대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고금리 빛에 의존하는 등 백책간두에 서 있고 중소기업 회생절차 간소화 등 합리적인 채무조정을 위한 지원이나 정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3) 중국의 소부장 산업에 비해 가격 경쟁력 등이 떨어지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독일의 인터스터리4.0의 스마트팩토리 전환 사업과 같은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 4) 소비자에게 생활용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B2C)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경제의 확대로 플랫폼의 오픈마켓을 통한 매출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 독과점 지위를 구축한 플랫폼 오픈마켓들의 과도한 중개 - 광고 - 배송 - 물류 - 결제 수수료 등으로 이익을 실현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 5)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가맹점·대리점 본사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소기업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필수물품이라며 시중가격 보다 고가의 물품 구매 강요, 직영점과 가맹점 사이의 가격차별, 가맹점주 단체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해제(부당 거래거절), 본사가 기획한 할인 쿠폰 및 할인 행사 등의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 하거나 과도한 폐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그 동안 많이 시정되어 왔던 불공정행 위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 6) 세계적인 탄소중립 및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이 급속히 추진되고 있지만,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산업구조 재편 상황에 전혀 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30년까지는 미래 자동차의 주축이 전기차로 전환될 예정이고, 곧 소멸될 내연기관 부품을 생산하는 10만8천여 명의 중소기업 종사자와 10만여 명의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들은 생존의 위기에 한층 다가서고 있다.

[참고] 한국자동차연구원 실태조사(2020.3월)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기업 및 고용의 약 47%(4,195개사, 10.8만명) 가 엔진·동력전달·내연기관 전기장치 등 사업재편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해당된다.

[참고] '국토교통 통계누리' 자동차관리사업자 업체 현황(2022년 4분기) 및 자동차관리사업 종사자 현황(2022.6월말)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정비업체는 종합/소형/원동기/전문 정비업 등 총 3만7천 개 정도이며, 종사인원은 약 10만 명에 달한다.

2. 윤석열 정부의 중소기업 위기 방지 행정 및 대책의 한계

- 1) 철강, 플라스틱, 종이 등의 소재, 부품의 재료를 공급하는 대기업들은 독점(시장 점유율 50% 이상) 내지 과점(3개 기업 75% 이상) 상황이어서 해외 원자재 가격 상승을 계기로 재료 가격을 일방적으로 크게 올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반면,

소부장 중소기업 단체들은 단체협상을 통해 거래조건의 개선을 원하지만 재료 독과 점 기업들은 개별 중소기업별로 일방적인 인상 통보만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와 산업자원부가 나서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나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가격예고제, 단체협상 등 다양한 대안을 모색해야 하나 시장자율만 강조하며 팔짱만 끼고 있는 상황이다.

- 2) 2022년 12월, 여야 합의로 원재료 가격 인상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법(상생협력법)」은 마련됐지만, 중소기업들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여 반영된 쌍방 합의 시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에 대한 불안감 느끼고 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납품단가 연동제를 숙원과제로 여겼던 중소기업들은 법안의 통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납품거래가 실현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 3)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부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확대 등 디지털 경쟁력 강화 정책이 추진되었지만 윤석열 정부는 ‘스마트팩토리’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소부장 산업의 보호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비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 4) 전기차 전환에 따라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 생산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 산업 종사자를 위한 업종전환, 직업전환 등을 지원할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 방치되어 있다.
- 5) 카카오 불통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도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뚜렷하게 진행되는 것은 없고, 플랫폼의 입점 중소상공인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노출랭킹 조작, 광고와 판매 장려금 강요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만을 외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 6) 문재인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하고 석탄발전, 전기차 등 탄소중립정책 추진을 위한 산업재편이 필요한 분야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업종전환, 직업전환 등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탄소중립정책,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계승하지 않고 급속한 전기차 전환에 따른 내연기관 부품 중소기업과 자동차 정비업체 위기를 방관하고 있다.

3.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하는 중소기업 대책

〈3고(高)와 산업구조 재편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과 입법의 추진〉

- 1) 중소기업들이 개별 기업차원이 아니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단체 차원에서 대기업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협상을 할 수 있는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과 같이 시장지배력이 작은 일정한 요건의 중소기업 협회나 단체에게 대기업을 상대로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단체행위를 허용하여 고질적 갑을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참고] 일본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상대방 대기업과 거래조건 개선을 위해 단체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대방 대기업에 성실교섭 의무도 부여하고 있다(일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의2 제12항).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 등을 촉진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본사, 부품중소기업, 소비자 사이에 3:3:3으로 배분하는 원칙을 수립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중소기업들의 단체협상 전통이 있기 때문이다.

[참고] 독일도 중소기업단체들이 대기업과 공동교섭을 위한 행위에는 담합행위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단체들은 물론 심지어 화물자동차 기사단체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도 마구잡이로 담합행위로 제재하려고 하고 있다.

- 2) 2013년 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사건을 계기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을(乙)지로위원회’는 소기업인 가맹점, 대리점들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피해에 대응하여 중소상공인들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여론화하고 단체협상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결해 왔던 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감독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현재 새로운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되어 있는 가맹점, 대리점, 하도급 등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할 것이다.

- 3) 철강, 플라스틱, 종이 등 소부장 기업의 원재료 공급을 독과점 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독과점 지위를 남용하여 원재료 가격을 크게 인상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전자, 조선, 자동차 등 조립완성품 제조업체들과 건설회사들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제대로 감독행정을 하는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 활동을 강화할 것이다.

- 4) 독과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자사상품 우대행위, 입점업체 상품 차별행위 등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를 위한 대응을 국회차원에서 논의하고,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온플법)」 통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참고] EU의 독과점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인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가 2023년 5월부터 시행되고, 독일과 영국, 호주 등은 각국 공정거래법 개정과 행정입법을 통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상품 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인앱결제 강요(Anti Steering) 등 독과점 남용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5) 민주당 윤관석·강병원 의원 등의 발의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전기차 전환에 따른 엔진 등 내연기관 부품업체 종사자 10만8천여 명과 자동차 정비업체 종사자 10만여 명의 업종전환, 직업전환을 위한 교육훈련과 상담, 전환비용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미래자동차 전환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 Tel 02-2630-0150 /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010-4222-3925 /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김인아 보좌관(박주민 의원실) 010-3646-0626

《‘민생회복 프로젝트’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5차) 소상공인 분야

-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

2023.4.5.(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책임의원, 서영교·박주민·김경만·이동주 국회의원 참석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총 8회)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붙임1 참조)’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공동 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추진하는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붙임2 참조)’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오늘은 다섯 번째로 <소상공인> 분야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소상공인들이 호소하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제별 책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을 진행했다.
-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3월 27일 박주민, 서영교, 이동주 의원이 참여한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소상공인 분과)’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은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소상공인’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폐해의 심각성

- 1)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의 급성장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오픈마켓과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입점업체)와 소비자를 중개거래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있고,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소비자의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존도도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1] ① 온라인쇼핑 비중 2022년 206조원으로 전체 소매판매 551 조의 27.3% 차지, ② 온라인쇼핑 거래액 추이 : 2010년 25조2천억, 2015년 54조, 2019년 134조, 2020년 157조3천억, 2021년 187조, 2022년 206조로 급증 ③ 음식서비스 (61.5%), 생활용품 (48.9%), 음식료품 (39.4%) 등 소상공인 업종분야 급증 ④ 이베이코리아(G마켓, 옥션)·SK플래닛(11번가)·인터파크·포워드벤처스(쿠팡) 등 4대 온라인쇼핑 플랫폼 비중이 114조로 약 55% 차지함 (자료: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참고2] ① 배달앱 3사의 외식 배달음식 플랫폼의 독과점 시장구조 : 배달의 민족 57.7%, 요기요 24.7%, 쿠팡이츠 17. 2% ② 코로나 19 이전에도 O2O(Online to Offline) 거래의 급속한 증가 : 온라인에서 구매 탐색, 의사결정 결제 → 오프라인에서는 소비만하는 거래 ③ 배달음식 앱 거래 : 2017년 2조 3,453억원 → 2018년 4조1,799억원으로 2배 증가, 2019년 1분기 1조 7,910억원으로 2018년 1분기 9,258억 대비 93.5% 증가 ④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1인 가구 증가, 모바일 결제서비스, 배달대행 등으로 플랫폼 중개서비스 거래가 급속히 발전함(자료 :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

- 2)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거래의 경우 규모의 경제 등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효과가 지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 관련 피해사례 등이 상당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참고1] 중소기업 중앙회 「2021년 플랫폼 불공정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년 내에 플랫폼거래에서 불공정 경험을 하였다는 입점업체가 20.7%, 과도한 수수료 등 수익배분이 불균형하다는 입점업체가 39.7%에 달했으며, 수익배분이 적정하다는 업체는 11%에 불과했음

[참고2]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 온라인플랫폼 이용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53.4%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 시 수수료 및 거래절차 관련 부당행위, 타 플랫폼 이용 제한 및 차별적 취급, 부당 요구 등 플랫폼 사로부터 부당행위를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음(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2023.2.20.)

- 3) 특히 두 세 개의 플랫폼이 지배하는 독과점화와 같은 승자독식 시장이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바,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개서비스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좋은 상품·서비스는 직접 판매하여 판매점유율을 늘리고 있으며, 중개수수료뿐만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입점업체들에게 과도한 수수료와 비용을 전가시키고 있다.

더 나아가 플랫폼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자사 상품의 노출 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시간 등에서 우대하고 자사 상품과 경쟁하는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 지배 남용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 같은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상품 중개행위를 동시에 영위함으로써 상시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일부 플랫폼에 의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하원 법사위 반독점소위에서 발표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2020.10.6.)」는 진입장벽과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은 디지털 시장의 특성상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배력을 남용하여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언론의 기능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또한 동 보고서는 GAFA(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등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이 각각 소셜네트워크, 검색광고, 전자상거래, 앱마켓 시장 등에서의 지배력을 바탕으로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자사우대행위 등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지배력을 유지·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함(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2023.2.20.)

4) 경기침체가 장기화되자 가맹점·대리점 본사들이 영업의 어려움을 소기업인 가맹점주, 대리점주들에게 전가하는 각종 불공정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필수물품이라며 ‘시중가격 보다 고가의 물품 구매 강요’, ‘직영점과 가맹점 사이의 가격차별’, ‘가맹점주 단체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물품공급 중단 및 가맹해제(부당 거래거절)’, ‘본사가 기획한 할인 쿠폰 및 할인 행사 등의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거나 ‘과도한 폐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그 동안 많이 시정되어 왔던 불공정행위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5) 또한 온라인 포털 플랫폼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언론지형 등에도 광범위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 언론진흥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를 언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뉴스 독자 대부분이 포털을 통해 언론기사에 접속하고 있어 언론의 포털에 대한 종속성 또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참고1]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1 언론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인터넷 포털을 언론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5.1%였고,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포털 뉴스 이용자가 84.5%임. 또한, 네이버로 뉴스를 본다는 응답자가 68.8%로 전체 인터넷 포털 이용자의 90.7%를 차지함

[참고2] 2021년 기준으로 검색시장에서 네이버가 56%를, 모바일 메신저 시장에서는 카카오톡이 92%를, e-커머스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17%를 차지함(관계부처합동,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2022.12)

[참고3] 2023년 2월 27일. 경인일보가 국내 포털 시장 과점 지배자이자 경쟁관계인 네이버-카카오 두 포털사가 함께 거래를 거절한 것이 언론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위반 사항이라는 이유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함. 국내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64.5%)와 카카오(다음·19.9%)는 합계 점유율이 84%가 넘는 과점 지배자다. 포털 시장을 두고 경쟁해야 할 두 사업자는 언론사 인터넷 뉴스의 포털 공급 방식을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기구를 통해 공동으로 진행해 왔음

6)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인 단체들은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대표적인 영역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불균형을 들고 있다.

2.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폐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의 한계

- 1)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은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2022.10.17.)고 강조했으나,

정부는 오히려 민간 주도 자율규제 원칙만을 내세우며 플랫폼의 입점업체와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부과, 노출랭킹 조작, 광고와 판매 장려금 강요 등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아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참고1]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19일부터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사업자 간 갑-을 관계 정책과 관련하여 민간 주도의 자율규제 원칙에 따라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구체적 자율규제 방안 마련을 위하여 ① 갑을, ② 소비자이용자, ③ 데이터시, ④ 혁신공유·거버넌스(ESG) 등 4개 분과별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를 운영하고 있음

[참고2] 2022년 9월 1일 시작된 플랫폼 민간 자율기구 갑을분과회의에서 입점업체는 10대 요구사항(① 신의성실 원칙 적용, ②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③ 수수료 적경비용 산정 ④ 수수료 상한제·차등제 적용, ⑤ 수수료 광고료의 명확한 설정, ⑥ 판매대금 정산시기 명확화, ⑦ 검색기준 공개, ⑧ 단체협상권 인정, ⑨ 플랫폼 유통공시제, ⑩ 일방적 계약해지 금지)을 제시했으나 플랫폼기업들은 위 밑줄 친 5개항만 합의하고 핵심사항은 거부함(과도한 수수료 규제, 랭킹노출 등 검색기준 공개, 단체협상권 등). 더구나 플랫폼 자율기구에 참여하지 않은 플랫폼 기업들에는 위 자율합의가 적용되지 않음

- 2) 윤석열 정부는 독과점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강조하며 시장자율에 맡기고, 카카오 불통 사태에서 드러난 일부 독과점 폐해에 대해서만 대응 TF를 구성하는 등 소극적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 이 대응 TF에는 그 동안 윤석열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담론을 주도해 온 인사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3) 윤석열 정부의 자율규제 정책이 가능하거나 자율상생이 되려면 적어도 입점업체에게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 대등한 거래조건 교섭이 가능해야 한다. 자율협약에 필요한 입점사업자단체 단체협상권 부여, 합의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때 공정

거래위원회 등의 행정개입 등 자율상생 정책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온플법)」이 필요하다.

- 4) 결론적으로 산발적으로 오픈마켓, 배달앱, 검색 등 분야별 시장조사나 불공정행위조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미국 하원의 「디지털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처럼 플랫폼이 시장과 사회에 미치는 지배력 정도, 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양태, 그에 따른 부작용과 필요한 입법 등에 대한 종합적 조사가 필요하다.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나 정당차원의 디지털시장 경쟁조사가 필요하다.

[참고] 미국은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플랫폼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전문 감독부서인 ‘디지털 시장감시국’이란 전문부서 신설하고 국회에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3.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을지로위원회가 제안하는 소상공인 대책

〈독과점 플랫폼으로부터 입점업체, 소비자, 언론 등의 보호를 위한 대책〉

- 1) ‘네카쿠배(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 민족)’등 독과점 플랫폼기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실태조사를 추진할 것이다.

- (1) 한국은 다국적 독과점 플랫폼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뿐만 아니라 국내 플랫폼 기업인 ‘네카쿠배’의 독과점에 따른 많은 피해 사례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참고] 미국과 EU차원에서 가파(GAFA ;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독과점 규제 입법을 추진할 때 입법 필요성과 입법 내용(규제 대상, 범위, 방식 등)을 정하는데 방향 제시를 해 준 것은 미 하원 법사위원회(Committee on the Judiciary) 산하의 ‘반독점·상업·행정법소위원회’(Subcommittee on Antitrust, Commercial and Administration)에서 추진한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 보고서(Investigation of Competition in Digital Markets)’임

- (2)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을지로위원회는 미국 하원의 「디지털 시장 경쟁 조사」와 같은 한국판 「디지털 시장 독과점 플랫폼의 실태 조사」를

통해 정확한 독과점 플랫폼의 폐해의 실태 파악과 대안 제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 (3) 한국판 「디지털 시장 독과점 플랫폼의 실태 조사」는 디지털 시장에서 독과점 플랫폼이 진입장벽을 형성하여 디지털 스타트업 등의 혁신을 가로막고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침해,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 침해 등 전반적인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온라인 검색, 온라인 상거래 소셜네트워크와 소셜미디어, 모바일 앱 스토어, 모바일 운영체제, 디지털 지도, 클라우드 컴퓨팅, 음성비서, 웹 브라우저, 디지털 광고 등 주요 플랫폼 시장 영역별로 독과점 플랫폼의 영향을 분석할 것이다.

- 2) 세계적으로 독과점 플랫폼에 대해 공통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안티스티어링(anti-steering)’ 등 적어도 4대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독과점 플랫폼 규제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 EU는 독과점 플랫폼의 규율을 위한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 Act, DMA)를 제정하여 2023년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고,
- 독일은 공정거래법에 해당하는 「경쟁제한방지법」을 개정하여 2021년 1월부터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 EU, 독일 등이 독과점 플랫폼의 독과점 지위남용 행위 중 공통적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크게 4가지 행위이다. ‘자사우대, 입점업체 차별행위’,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안티 스티어링(Anti-Steering)’ 등이다.

[참고] 카카오 모빌리티의 자사 가맹점인 카카오블루에 대한 배차 몰아주기(자사우대), 쿠팡이나 배달의 민족 등의 결제, 배송, 물류, 식자재배급 끼워팔기, 다른 오픈마켓보다 낮은 가격의 판매요구(최혜대우 요구), 안티스티어링(플랫폼 이용업체가 소비자에게 다른 플랫폼 또는 대체 결제수단 권유를 금지하는 것) 등은 한국의 독과점 플랫폼에서도 가파(GAFA)를 그대로 모방하여 시행하고 있는 독과점 지위남용 행위의 대표적 사례다

- 3) 더불어민주당은 독과점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광고비 등 비용 전가, 자사상품 우대행위, 입점업체 상품 차별행위 등 독과점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영세사업자에 대한 우대 수수료를 적용, 공정거래위의 수수료 관련 실태조사 실시 및 공표, 사업자단체 보상 문제 등까지 촘촘하게 국회차원에서 논의하여,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약칭, 온플법)」 통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 4) 소상공인단체의 단체교섭을 통한 거래조건 개선 상생협약 활성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상생협약 체결을 위한 점주단체 구성권이 명문화돼 있지만 본사가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제재할 수단이 없다. 더욱이 「대리점법」에는 단체교섭권에 대한 명문 규정도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의 플랫폼 중개거래 조건 개선과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입점업체단체의 단체교섭권과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단체 간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참고] 현재 한국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기협동조합의 공동행위는 담합의 예외로 인정. 공정거래법은 원칙적으로 담합 부당공동행위 거래조건 개선과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가받으면 가능하나 인가 받은 사례가 없음. 독일은 중기의 공동행위에는 담합 적용제외. 일본은 협동조합 활동에는 담합 적용 제외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 Tel 02-2630-0150 /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010-4222-3925 /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김인아 보좌관(박주민 의원실) 010-3646-0626

《‘민생회복 프로젝트’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6차) 〈특수고용노동자〉 분야

-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4.12(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책임의원, 이학영·이수진(비례)·여기구·박주민 의원 참석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총 8회)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붙임1 참조)’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공동 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추진하는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붙임2 참조)’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오늘은 여섯 번째로 〈특수고용노동자〉 분야 ‘특수고용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들의 생존위기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제별 책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을 진행했다.
-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4월 3일 박주민 의원, 각 의원실 보좌진이 참여한 ‘책임의원 정책간담회(노동·고용1 분과)’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특수고용노동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특수’로 가려진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들의 생존위기

- 1) 임금노동자도 자영업자도 아닌 중간 노동법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이하, 특고노동자)는 최소 165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며, ‘플랫폼노동’과 같은 ‘특수고용’ 직종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1]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종속적 계약자(dependent contractor)란 표현이 가장 정확한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특수’한 개념으로 잘못 쓰여지고 있다. 즉 특수고용노동자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계약 상대방에게 종속되어 일을 제공하는 계약자다.

[참고2]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특수형태근로(특수고용) 종사자의 규모추정을 위한 기초연구」에 의하면, 스스로를 ‘임금노동자’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특수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노동자(종속적 근로관계의 노동자이나 ‘임금근로자’로 잘못 분류된 종사자)가 745,397명, 종속적 자영업자로 분류될 수 있는 종사자가 913,611명으로 ‘특고노동자’ 규모는 1,659,008명이다. 또한 진성 1인 자영업자는 아니면서 특수고용 종속성이 약한 ‘새로운 유형’의 종속적 계약자 550,335명을 포함할 경우 그 수는 2,209,343명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2011년 고용노동부 실태조사(130만명)와 비교하면 7년 새 100만명 가까운 특수고용 노동자가 늘어난 것이다. 플랫폼노동처럼 새로운 산업의 등장으로 특수고용 직종이 지속적으로 분화·증가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 2) ‘특고노동자’는 경기, 서울 등 대도시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40~50대 취업자가 대다수로 플랫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배달, 택배, 물류, 돌봄 등 필수 노동에 종사하고 있어 우리 경제활동의 중추를 책임지고 있다.
-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고노동자’는 산재, 고용보험 등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에서

도 사각지대에 있고, 근로시간 보호를 받지 못하여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와 산재 피해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참고1]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김준영 외, 2021)에 따르면, 2020년 현재 플랫폼종사자의 30% 가량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현재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가입하거나 임의가입 등을 통해 가입한 사람들은 그 중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 역시 30%가량에 머물고 있다.

[참고2] 최근 양대 노총의 조사에 따르면 특수고용노동자의 43.8%는 주 평균 6일을 일하며 주당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경우가 55.4%로 나타나 특수고용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이 상당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주된 원인은 일감 대비 낮은 수수료와 관련되어 있다. 임금노동자와 비교하면 시간당 임금이 낮고, 특수고용노동자는 이를 더 많은 노동을 통해 보충해야하기 때문이다.

- 4) 1년에 20여명이 넘는 택배기사 과로사를 목격한 우리 사회의 비등한 여론으로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적 협약’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으나, 생존위기에 처한 ‘특고노동자’ 보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양심적인 사회적 목소리가 재계의 산업경쟁력 논리에 밀려 제대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5) 더구나 대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로 ‘특수고용’을 적극 활용해 왔고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도 그 활용 빈도가 매우 높다.

한국에서 특수고용과 플랫폼노동이 증가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지고 기술진보 등의 영향도 있지만 주로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활용한 측면이 매우 크다. 조선산업 대기업들은 사내하청을 넘어, 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 노동법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량팀’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 6) 법원은 택배기사 노동조합 사례와 같이 ‘특고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하고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작업조건이나 보수조건에 대한 교섭을 하지 못하여 낮은 수수료에 ‘근로빈곤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7) 결론적으로 한국은 이미 OECD 주요 국가에 비해 ‘특고노동자’형태의 고용이 비대하다. 이를 방지하면 불안정 고용상태의 ‘특고노동자’가 급속하게 확대될 위기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새로운 유형의 ‘특수고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2. 윤석열 정부에서 방치되거나, 오히려 공격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 1) 윤석열 정부 들어 ‘특고노동자’등 비정규직 관련 정책이 거의 전무하고 그동안 추진되었던 의미 있는 정책들도 중단되거나 후퇴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특고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의 확대 적용이 더 이상 계획되어 있지 않아 상당수의 ‘특고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로 남게 될 수 있다. 14개 직종까지 확대된 산재보험 적용은 이후에도 확대·적용되어야 하나 추가 직종 발굴에 대한 계획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이다.

- 2) ‘특고노동자’는 ‘종속적 계약관계’종사자이고, 법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ILO와 같은 국제기구도 노동법의 보호영역에 ‘특고노동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화물자동차 기사들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담합행위를 적용하여 처벌하겠다고 하는 등 이들의 열악한 처지를 이해하고 보호정책을 고민하기 보다는 형사처벌의 논리로 맞서고 있다.

- 3) 윤석열 정부의 ‘특고노동자’문제에 대한 대처는 세계적인 ‘특고노동자 대책’과는 정반대 방향이고 과거 100년 전으로 돌아간 역사적 퇴행이다.

이미 체결된 ‘사회적 협약’의 이행마저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어렵게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 낸 ‘안전운임제’는 거의 파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가 곳곳에서 멈추고 사회 전반적으로 정부의 편향적 지원에 힘입은 대결국면이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참고1] 10년 전만 해도 ‘특수고용노동자’는 독립된 자영업자이니 알아서 해야지 어쩔 수 없다는 사회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특고노동자’라는 추상개념으로 가려진 그 본질이 자신의 작업조건이나 거래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이고, 법적·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ILO와 같은 국제기구도 노동법의 보호영역에 ‘특고노동자’와 같은 종속적 계약관계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다.

[참고2] 과거 150년 전 노동조합을 반독점법에 의해 담합행위로 처벌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노동조합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이 소득의 적절한 분배와 내수경제 활성화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반성에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률이 발전해 왔다.

3. ‘특수고용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과제 제안

- 1) 먼저, ‘특고노동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그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촉구하고 정부가 계속 외면한다면 국회 차원의 전면적인 ‘특고노동자’ 실태조사에 나서도록 견인하겠다.

2018년 이후 비대면 경제 확대로 배달, 택배 등 플랫폼 종사자가 급증하고 조선산업, 건설산업에서도 물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특고노동자’가 확대되는 등 새로운 유형의 ‘특고노동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2018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특고노동자’ 실태조사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윤석열 정부는 실태조사마저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하나 잘못 분류되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에는 노동법 보호를, 종속적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거래조건, 작업조건 개선 위한 단체협상권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고용 형태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도 실태조사는 필수적이다.

- 2) 사실은 ‘임금근로자’인데 ‘특고노동자’로 계약이 잘못 체결되어 3.3%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는 ‘오분류’(misclassification)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분류 문제를 법원의 판결에만 맡기지 말고 대법원 판례상 노동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단되는 56개 정도의 업종으로 소분류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거친 행정해석을 통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야 한다.

법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므로 노동위원회에 산하에 ‘(가칭)특수 고용노동자 분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특고노동자’ 분류 작업을 통해 오분류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

[참고1] 매년 노동자임에도 잘못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인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까지 족히 3~4년은 걸리고 언제든 지 부당하고 내지 거래거절의 상황에 있는 ‘특고노동자’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참고2] 대법원 판례상 노동법의 보호대상이라고 판단되는 56개 정도의 업종으로 소분류 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등으로 인정하는 조치나 행정 해석을 내 놓아야 한다. 특히 법원이 택배기사나 방문점검원 사례와 같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자성은 인정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적극행정을 통해 최소한 단체교섭을 통해 거래조건, 작업조건을 개선하는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참고3] 법원이 특고노동자에 대해 근기법 및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판결 : ▲2021.7. 대법원이 재할트레이너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을 판결한 사례 ▲ 2022.2. 서울고등법원이 KBS 프리랜서 아나운서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부당하고 구제를 판결한 사례 ▲ 2022.4. 대법원이 물류센터 모바일 서포터를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 부당하고 구제를 판결한 사례 ▲2022.6. 서울 행정법원이 온라인 배송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사용자인 택배사에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판결한 사례 ▲2022.7. 서울행정법원이 코웨이 코디(방문점검원)를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단체교섭 응낙의무를 판결한 사례 등

- 3) 플랫폼의 독과점 심화로 배달, 택배, 물류 등 플랫폼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의 거래조건, 작업조건은 더욱 더 열악해 지고 있다. 플랫폼종사자 노동조합이나 단체가 플랫폼 기업과 직접 단체교섭을 통해 거래조건, 작업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을 통해 노사 자율교섭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입법을 최종 완성함과 함께 현장에서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적극행정'을 하도록 촉구하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도 이러한 교섭과 대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참고1] 직접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잇따르고 있다. 택배 기사나 방문점검원 등도 그러한 사례다.

[참고2] 현재 이러한 법원의 판례 추세를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지배하거나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입법화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안이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본회의 통과를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한다면 앞서 살펴본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4) 윤석열 정부에서 멈춰 버린 '특고노동자'의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확대 노력이 계속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필요하면 입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현재 14개 업종의 '특고노동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특고노동자'업종 전반으로 확대할 것이다.

'특고노동자'의 거래조건과 작업조건 개선을 위해 최소한 단체교섭이 허용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현대국가 시민들의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입법과 행정을 통해 필수적으로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참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보험법상의 근로자의 범위는 정책적 영역의 문제이고 세계적 추세는 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최대한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을 구성하고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입법이나 판례가 발전해 왔고, OECD 주요 국가는 정책적으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적어도 산재나 고용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를 하고 있다. 택배, 배달기사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낮은 수수료를 장시간 노동으로 보충하고 있는 '특고노동자'들에 더 많은 산재와 실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 5) 새로운 유형의 '특고노동자'가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일일이 입법과 행정해석을 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상권 인정 여부를 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법적 교섭이 아니더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사

회적 대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민주당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문체부, 중기부 등 범정부 협력행정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특고노동자’업종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적 대화’와 ‘사회적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직접 지원하는 활동을 추진할 것이다.

[참고]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용자와 특고 노동자 노동조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거래조건 개선이나 과로사, 과로운전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모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 성공적 사례들이 다수 있었다.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는 택배사나 택배대리점, 택배노동조합 사이의 단체교섭을 통해서 해결이 어려워 화물주 단체와 소비자단체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행정기관이 모두 모여 무려 1년여의 장기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과로사를 초래하는 공짜노동으로 비난 받았던 택배화물 분류작업에서 택배기사를 벗어나게 하거나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도록 하고 심야작업 금지, 산재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합의하도록 하였다. 그 전에 화물자동차 기사들의 과로운전으로 대형 인명사고가 잇따르자 다단계 도급구조를 해결하고 화물기사들이 과로에 내몰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사회적 합의도 있었다.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 Tel 02-2630-0150 /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010-4222-3925 /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김인아 보좌관(박주민 의원실) 010-3646-0626

《‘민생회복 프로젝트’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7차) 〈문화콘텐츠 창작자〉 분야

-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4.19(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책임의원, **홍익표·유정주** 국회의원 참석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총 8회)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붙임1 참조)’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공동 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추진하는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붙임2 참조)’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오늘은 일곱 번째로 〈문화콘텐츠 창작자〉 분야 ‘프리랜서·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폐해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문화콘텐츠 창작자들의 생존위기 심각성과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제별 책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을 진행했다.
-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4월 10일에는 박주민·유정주 의원과, 각 책임의원실 보좌진이 참여한 ‘책임의원 정책간담회(노동·고용2 분과)’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문화콘텐츠 창작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세계를 주도하는 한국의 문화산업, 그러나 창작자는 생존위기

- 1) ‘문화콘텐츠산업’은 2021년 기준 연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5%를 기록하는 한국의 대표적 고성장 산업이다. 특히 ‘한류’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참고1] 한국콘텐츠진흥원의「2021년 하반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보고서에 따르면, K-콘텐츠는 2020년 기준 직간접 수출효과 105억 달러, 생산유발효과 21조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0조 원 등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참고2] 문화체육관광부의「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음악, 영화, 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등 콘텐츠산업의 매출액은 2021년 기준 137조5,080억 원으로 2017~2021년 사이 연평균 5.0% 성장하였다. 수출액도 2021년 기준 124억 5,290만 달러도 2017~2021년 사이 연평균 9.0% 성장하였다.

[참고3]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콘텐츠산업 2022년 결산 및 2023년 전망 세미나」자료에 따르면, 한국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시장점유율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에 이어 7위를 차지한다. 2022년 국내 콘텐츠산업의 매출 규모는 146.9조 원으로 전년 대비 7.4% 증가했다. 수출액은 130.1억 불, 고용 규모는 65.7만 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1.5%, 1.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 2)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 분야는 창작자의 꿈을 실현할 전망의 산업이자 직업으로 삼고자 하는 꿈의 영역이 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세대들이 영화, 게임, 방송, 웹툰, 음악 등 문화산업과 창작분야에 뛰어들고 있다.

[참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청년 종사자(40대 미만) 비중은 78.3%로 타 업종 평균 33.9%인 것에 비해 2.3배 청년 비중이 높다. 고용·취업 유발계수 또한 전체 산업 평균보다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출처: K-콘텐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2023.4.10.)

- 3) 그러나 ‘문화콘텐츠산업’은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매우 높고, 제작업자와 유통업자 사이의 불균형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 유통의 독점은 자본의 영향력을 키우게 되는데, 문화콘텐츠 사업은 일부 거대 기업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체제가 구축될 것이 예상된다.

[참고] 문화체육관광부의「2020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매출액 10억원 이상의 콘텐츠기업은 단 13%에 불과하고 10인 미만 사업체가 92%를 차지하고 있다.

- 4) 또한 문화콘텐츠산업 내부를 들여다보면,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무상양수, 영화와 방송 스태프들의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보수 등 각종 불공정행위가 만연하여 청년 창작자들이 생존의 위기에 처해 있고, 불공정의 벽을 건너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2021.9.27.)」에 따르면 기획·제작·유통·배급 산업 사업체의 33.6%가 10대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 특히 문화상품 창·제작자의 주체인 1인 창작자를 포함한 프리랜서 87.7%가 제작관련 방해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 검정고무신 웹툰 이우정 작가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故 이 작가 측은 만화 ‘검정고무신’ 지식재산(IP)으로 성사된 사업이 77개 이상인데 원작자가 15년 동안 받은 저작권료는 1200만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 생활고로 이어졌고 극단적 선택의 배경이 됐다고 부연했다.(전자신문 2023.3.30. “문체부, 만화 ‘검정고무신’ 불공정계약 진상조사 착수”)

- 5) 결국 국가적 차원에서 콘텐츠 진흥과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은 중요한 과제이므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과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

2. 윤석열 정부, 창작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 방지하면 문화콘텐츠산업 붕괴 초래

- 1) 작곡가의 저작권이나 연기자의 저작인격권을 영구히 회사가 행사하도록 하거나 (9.5%), 게임공급업체 게임 프로그램 창작자에게 소스코드나 운영매뉴얼 등 핵심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기술탈취 행위(12.2%), 티켓할인 등의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행위(11.5%) 등 소위 “갑질”형 불공정행위는 문화산업에서도 만연해 있다.
- 2)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창작에 들어간 비용이나 시간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을 책정하는 가격후려치기나(22.6%), 납품 후 재작업이나 수정을 요구하면서 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등 사실상 “공짜”로 창작물을 취득하는 사례(23.5%)도 빈번하다.
- 3) ‘문화콘텐츠산업’이 독과점 플랫폼에 종속화 되면서 뮤지컬, 공연 등의 창작물을 해당 플랫폼에만 올리도록 하거나(5.9%), 계열회사가 제작한 창작물을 다른 제작사가 제작한 창작물과 비교하여 우대하는 자사우대 타사 차별 행위(6.8%)를 하는 등 플랫폼 독과점에 따른 폐해는 문화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참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2021.9.27.)」에 따르면,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는 ▲제작활동 방해 ▲문화상품 수령/유통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및 미보상 ▲기술정보 강제양도 ▲판촉·유통비용 전가 ▲자기계열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등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및 구매강요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무상양수 등이다.
- 4) 결국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청년 창작자들이 하나 둘씩 문화산업을 떠나가고 있다. 문화산업은 대규모 자본투자나 연구개발 보다는 젊은 창작자의 창작의욕에 의해서 발전하는 산업인데, 이렇게 창작자들이 생존하기 어려운 불공정 거래환경으로 창작자들이 대거 이탈하면 문화산업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한 때 아시아의 영화, 음악 흐름을 주도하던 홍콩의 문화산업이 미래세대를 키워 내지 못하면서 일거에 무너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3. 문화산업 불공정 근절과 혁신성장을 위한 5대 과제

1)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처리하도록 견인해 나갈 것이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34조는 예술인의 권리 침해행위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문체부장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 공정위가 조사,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체부가 공정위에 통보한 사건은 2018년 단 한 건에 불과하다.

문체부의 문화산업 관련 정책은 진흥책에 집중되어 문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조사나 제재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고 있고 공정거래 행정에 관한 전문성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 문화산업 내 대표적인 '10대 불공정행위'에 대한 금지규정을 두고 이를 위반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정위에 통지하여 공정위의 전문적인 불공정 조사와 과징금 처분 등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하여 법사위에 회부된 상태다. 그러나 방통위, 과기부가 플랫폼 기업의 이해를 반영한 이견을 법사위에 제출하여 법안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불공정행위가 콘텐츠 창작자의 생존에 미치는 심각성과 이를 방지할 경우 문화산업 자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겠다.

- 2)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문화콘텐츠 거래 불공정’ 문제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문화콘텐츠과’를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에 불공정 문제를 다루는 협력행정 체계를 구축하도록 전인해 나갈 것이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문체부가 적극적인 행정으로 ‘문화산업 10대 불공정행위’들을 조사하여 공정위에 보내더라도 공정위 내에 문화콘텐츠 거래의 불공정 문제를 다루는 전문적인 부서가 없으면 입법 목적은 실현되기 어렵다.

현재는 공정위 ‘시장감시국’ 산하의 ‘서비스업감시과’에서 문화산업 불공정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문화콘텐츠 거래는 일반적인 서비스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와는 완전히 성격을 달리하고 거래의 내용도 전문적이어서 서비스거래 일반의 문제로 다룰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내에 ‘문화콘텐츠과’를 신설하여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조사를 하고 관련 전문성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정위와 문체부가 협력하여 문화산업 불공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할 것이다.

- 3) 문화산업의 경우에도 자리 잡고 있는 플랫폼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독과점 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문화산업 내에서도 산업의 플랫폼화는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카카오, 네이버 등의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문화산업 기업들을 인수하여 계열화하는 방식으로 빠르게 산업을 잠식해 가고 있다. 멜론 등 음원판매 기업이 카카오에 인수되었고 음원의 판매도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플랫폼에 접속하여 이루어진다. 웹툰의 소비도 대부분 플랫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창작자들은 플랫폼기업이나 그 계열 기획사가 정하는 거래조건에 따라 문화 창작물들을 소비자에게 유통하고 있다. 사실상 플랫폼기업이 창작자들과 문화 기획사

(CP) 사이의 거래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다. 플랫폼 독과점 문제는 비단 문화산업만의 문제는 아니나,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문화산업에 미치는 플랫폼 독과점 문제도 개선해 나갈 것이다.

- 4) 영화와 방송, 웹툰 등 지역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도 문화산업 불공정행위 조사와 분쟁조정에 관한 행정권한을 부여하는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영화와 드라마, 웹툰, 게임 등 문화상품 제작 지원을 위한 공간과 시설을 마련하고 예술인 마을 조성 등 관내 예술인 지원 행정을 하고 있다.

특히 문화콘텐츠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문제는 지역 문화산업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를 중앙의 문화산업 대기업이나 플랫폼 대기업들이 뺏아가는 것이어서 「경기도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와 같이 문화산업 불공정 실태조사와 분쟁조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문화산업 ‘적극행정’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화산업 불공정 실태조사나 분쟁조정 등을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상 위임 규정을 마련할 것이다.

- 5) 영화산업에서 시작된 산업·업종 단위의 ‘공정경쟁협약’이 방송, 웹툰, 게임, 음악, 공연 등 문화산업 전체 업종별로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산업별로 ‘공정경쟁협약’을 통해 산업 내 종사자들 사이의 다양하고 복잡한 거래관계에 관한 ‘집단적 공정거래’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화산업은 ‘국제시장’ 영화 제작 때부터 ‘공정경쟁협약’을 통하여 스태프들의 최저보수, 작업시간의 한도, 식사제공 등 종사자들의 작업조건과 거래조건을 정하고 있다. ‘공정경쟁협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이나 고충처리를 담당하는

「영화인신문고」는 「대체적 분쟁조정제도(ADR)」를 활용하고 있다.

영화산업에서 이루어진 이러한 ‘공정경쟁협약’은,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고 창작자의 공정한 보수와 스태프 종사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도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문화산업 업종 전반에 확산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공정경쟁협약’이 문화산업 전반에 체결되어 문화산업 종사자와 창작자들이 그들의 열정과 헌신에 비례한 공정한 보수와 작업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활동을 할 것이다.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 Tel 02-2630-0150 / 을지로위원회 사무국 : Tel 02-6788-3201

박정식 정책네트워크실장 010-4222-3925 / 이원정 총괄팀장 010-5387-9680

/ 김인아 보좌관(박주민 의원실) 010-3646-0626

《‘민생회복 프로젝트’연속토론회 결과 브리핑》

(8차) 〈돌봄노동자〉 분야

-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제안 -

2023.4.26(수), 오후 4시 40분,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

책임의원, 박주민·최혜영 국회의원 참석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총 8회)는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당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붙임1 참조)’ 일환으로 당면한 민생 위기 극복 해법을 추가로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원장 정태호 의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가 공동 주최하고, 직능단체,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 등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소속 39명의 국회의원이 정책과 입법과제를 전담·추진하는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붙임2 참조)’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다.
- 오늘은 마지막 여덟 번째로 〈돌봄노동자〉 분야 ‘돌봄노동자의 고용불안 위기 극복 방안’을 주제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개선 대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제별 책임의원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발제·토론을 진행했다.
- 오늘 토론회에 앞서 지난 4월 17일에는 남인순·최혜영 의원과, 각 책임의원실 보좌진이 참여한 ‘책임의원 정책간담회(노동·고용3 분과)’를 열고 토론회 세부 토론

의제 및 정책입법과제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책임의원 정책간담회’와 오늘 토론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제안된 내용에 대해 면밀히 검토 한 후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를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에게 제안하고, ‘과제별 책임의원’ 중심으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돌봄노동자’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돌봄서비스’와 돌봄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돌봄노동’의 중요성

- 1) 급속한 인구 고령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의 가족 중심 돌봄에서 국가·사회적 돌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 과정에서 돌봄서비스 제공 종사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 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로 한정하 협의의 돌봄노동자 규모는 2011년 71.7만 명에서 2021년 110만 명으로 최근 10여 년간 큰 폭으로 증가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참고] 돌봄노동자의 규모는 돌봄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2020년 12월에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에서 필수노동자 중 돌봄서비스 분야 종사자 규모를 108.7만 명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인원 추계는 소위 공식부문 사회서비스만을 포함한 것으로, 비공식부문인 간병인, 가사서비스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130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2년 8월)에서의 임금노동자(특수고용, 호출노동 포함) 2,172만 명 대비 6%에 해당한다.(출처: 남우근, “돌봄노동의 현황과 대안”, 『보다정의』 제6호, 2022.12., 정의책연구소)

[참고] 함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우리나라 돌봄노동은 얼마나 저평가 되었는가 (2022.1.27.)」발제문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가구 구조와 부양 의식의 변화로 돌봄 공백이 가시화 되면서 돌봄의 사회 책임을 강조하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2008년), 무상보육 도입(2013년) 등 다양한 돌봄 정책이 최근 10여 년간 사이 도입·확대되었다. 또한 함

부연구위원이 통계청「각년도 지역별고용조사」원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자료에 따르면, **협업의 돌봄 노동자**(사회복지서비스, 돌봄 및 보건서비스, 육아 및 가사도우미 종사자에 한정, 의사간호사 등 보건의료, 교사 등 교육서비스 종사자 제외)는 2011년 71.7만 명에서 2020년 100만을 넘어 2021년 110만 명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돌봄노동자의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초고령 사회, 모두의 관장은 돌봄을 위하여 : 돌봄, ‘반값 노동’에서 ‘관장은 일자리’로」정책포럼(2022.1.27.)]

[참고] 통계청 통계개발원의「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보건·복지·교육을 포괄하는 **광의의 돌봄 부문 일자리는** 최근 10여 년간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문으로 현재 **224.5만 명이** 돌봄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2011년 당시 보건의료 부문 52만 4천명, 사회복지서비스 부문 53만 2천 명, 교육서비스 41만 4천 명으로 총 148만 명이 돌봄 부문에 고용되어 있었다. 2021년에 이르러 그 수치가 각각 79만 4천 명, 98만 8천 명, 46만 3천 명으로 늘어, 총 225만 4천 명으로 증가했다.

- 3) **돌봄노동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돌봄은 상당부분 민간시장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으며, 돌봄 일자리의 질은 향상되지 않았다.** 무엇보다도 돌봄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상태와 열악한 처우가 돌봄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참고] 함유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의「우리나라 돌봄노동은 얼마나 저평가 되었는가 (2022.1.27.)」발제문에 따르면, 의사, 약사, 영양사 등 전문 돌봄직은 242만원→312만원, 서비스 직은 161만원→200만원으로, 제조업은 263만원→327만원으로 증가한 반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돌봄·보건 서비스 종사자, 육아 및 가사도우미를 포함한 협업의 돌봄직 월 임금**은 116만원→157만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육아 및 가사도우미는 94만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노동시간은 2020년 협업의 돌봄직 종사자 주당 노동시간이 31시간인데 반해 전문 돌봄직은 35시간, 서비스 직은 37시간, 제조업은 39시간으로 상대적으로 적고, 시간당 임금도 전체 종사자 대비 60~70% 수준이다. [출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초고령 사회, 모두의 관장은 돌봄을 위하여 : 돌봄, ‘반값 노동’에서 ‘관장은 일자리’로」정책포럼(2022.1.27.)]

[참고] 통계청 통계개발원의「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최근 돌봄 부문에서 일자리 증가를 견인한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는 저임금 비율이 높아, 2011년에서 2021년 사이에 임금 하위 20% 일자리가 20.3만 명 증가하였다. 돌봄 부문은 주로 여성이 종사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와 교육 부문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이 종사하는 반면,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평균 연령이 높고 고령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돌봄 부문 종사자는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높으며, 감정노동에 노출되

는 수준이 높았다. 특히 보건의로 부문은 장시간 노동이 빈번하고,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지 못하는 불완전 취업의 양상이 나타난다.

- 4) 질 좋은 돌봄이 지속 가능하려면 돌봄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 뿐 아니라, 돌봄을 주는 사람에게는도 행복한 일이 되어야만 한다.

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노인, 아동, 장애인 등의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높은 질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 환경 개선 및 처우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2. 윤석열 정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돌봄노동자의 열악한 상황

- 1) 돌봄서비스는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대부분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증표(일명 ‘바우처’)를 구매한 뒤 이를 돌봄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바우처’는 시간단위로 책정되기 때문에 돌봄노동자의 임금도 시간제로 결정된다.
- 2) 돌봄노동자들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이나 민간 위탁기관 등에 소속되어 기관을 통해 일을 배정받고, 그 기관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종속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3) 그러나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이동시간(일 51분)은 근로시간에서 배제되고 공휴일·유급휴일도 적용받지 못하는 등 「근로기준법」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다. [참고] 재가요양보호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시간 단위로 수가를 설정하기 때문에 70% 이상이 시간제 형태의 계약직 상태이다. 1일 평균 노동시간은 3.5시간, 주당 근로시간 17.4시간 등의 초단기 근로에 종사하고 월 급여도 80.8만원 미만이다.
- 4) ‘돌봄노동자’들은 이렇게 상시적인 고용불안, 불안정 저임금의 열악한 처우 상태에 있다. 이러한 돌봄노동자의 처우에서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5)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공공인프라 확충’ 대신 돌봄, 요양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복지 민영화 추진을 밝히고 있어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돌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로 돌봄의 공공성 강화와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서비스원’을 만들었으나 윤석열 정부가 집권하면서 기관 통폐합의 형태로 역할 및 기능을 축소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사실상 ‘사회서비스원’ 무력화 시도들이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다.

3.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돌봄노동자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5대 과제

- 1) 급격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공공성을 가지고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을 돌봄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이 핵심적 과제임을 확인한다.

- 2) 돌봄노동자에게도 교통비, 식대 등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돌봄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돌봄노동자에 대한 전면적인 근로감독과 「근로기준법」 준수 실태조사를 정부에 촉구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돌봄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 전면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근로감독을 강화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촉구하고 점검할 것이다.

[참고] 돌봄노동자는 위와 같이 시간단위로 임금을 받고 있고, 돌봄서비스 제공 공공기관이나 민간 위탁기관으로부터 일을 배정받고 지휘를 받는 등 종속적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교통비, 식대 등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 3) 서울시의 ‘사회서비스원’ 예산 삭감과 통·폐합 축소,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 등 돌봄노동자 처우를 악화시키는 정책과 사실상의 사회서비스원 해체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원’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방임하지 말고 책임 있는 대응과 그에 걸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차원에서 이러한 돌봄서비스 퇴행조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다.

[참고] 문재인 정부는 위와 같은 돌봄서비스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원칙과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돌봄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노력해 왔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서울시의회는 2022년 12월 사회서비스원 운영비를 요구안 대비 100억 원 삭감하였고, 서울시는 성동종합재가센터를 시작으로 12개 센터를 4개 센터로 줄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의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는 반면 민간지원사업은 확대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견제가 필요하다.

- 4) 돌봄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복지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원칙과 마찬가지로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원칙을 명확히 해야 한다.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러한 돌봄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임 원칙에 따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돌봄서비스 제공 관련 기관별로 돌봄노동자 단체들과 단체교섭을 통해 돌봄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근로기준법 준수 등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에 관한 내용을 교섭하도록 해야 한다.

[참고] 예를 들면, 「건강가정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 「모자보건법」과 「장애인복지법」의 돌봄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각각 관장하고 있다.

- 5) 더불어민주당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과 같이 (가칭) 「돌봄노동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또는 돌봄노동자의 근로자로서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기본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다.

「사회복지사법」과 같은 원칙과 가이드라인, 처우개선위원회에 더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 돌봄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과 근로감독 강화의 내용을 담은 「돌봄노동자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할 것이다. [참고] 2018년과 2021년, 201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고, 국가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처우개선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붙임 1-1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2023.1.12. 현재)

10대 비상대책	세부내용	법률사항	예산
①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	- 전월세 임대차 보증금을 대출받은 무주택자 대상 - 대출이자 1%를 정부가 지원, 금융기관 동참 유도	-	0.4조원
②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 대부업·불법사금융 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21년 7월) 이전 고금리 대출을 받은 저신용·저소득 서민 대상 - 제도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보증 및 지원	-	0.6조원
③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	- 2019년 이후 발생한 코로나부채 600조원 에 대해 정부 1.5%포인트, 금융기관 1.5%포인트 등 금리 인하 - 예산 9조원 = 600조원 × 1.5%	-	(당초) 12조원
④ 고정비 상환감면 대출 제도 도입 (한국형PPP)	- 코로나대출 이자감면 프로그램과 연계 - 성실상환 대상자 중심 시행	○ (기발의)	(변경) 9조원
⑤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대출	- 코로나 대출 800조원의 10%에 대한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 - 신보출자(4조원) → 보증배수(10배) → 대환대출 여력 (40조원)	-	4조원
⑥ 편셋 물가지원금 (명칭 변경)	- 물가상승 피해가 계층 중심의 하후상박형 지원 - 예산 50조원 = 1,700만가구(하위 80%) × 15~40만원	-	5조원
⑦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항구화	- 지역화폐 예산 증액(특별회계 설치) 및 계속운용 - 재원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의 법인세액(약 1조원)	○ (미발의)	1조원
⑧ 공공 주택 매입 후 임대 전환	- 삭감된 공공임대예산 5조원 복원 - 미분양 및 부실 주담대 주택 등 매입 후 공공임대	-	5조원
⑨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뱅크” 설립(배드뱅크)	- 미분양 및 부실채권 대책(비은행권 PF 정상화) - 부실기업 정리가 아닌 정상화가 목적, 비은행권 출자 참여 핵심	-	2조원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		(당초) 총 30조원 (변경) 총 27조원	

* 2023.1.12. 신년 기자회견 당시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 예산은 총 30조원 규모였으나 이후 ③ 코로나부채 이자감면 프로그램의 **코로나부채 규모**가 800조원에서 600조원으로 수정됨에 따라 당 예산도 12조원→ 9조원으로 변경되고 총 예산도 27조원으로 축소됨

붙임 1-2 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9대 민생회복 프로젝트”(2023.2.27. 현재)

목표	9대 민생 프로그램(상임위)	세부내용 및 추진 방안	대책 [‘23 예산]	수혜 대상
합계			예산 : 30조원 수준	
高금리 피해 회복	① 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 위험이 있는 저신용·저소득층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대출 지원 - (개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 서민금융법 제47조 제2항 단서를 통해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은행 출연비율 하한을 설정 → 이 경우 현재 은행 출연비율 0.03% → 0.03% 상향 하여 시중에 약 7,000억원 추가 자금 조달 효과 발생 	입법: 서민금융법 → 0.7조원 대출 효과 예산: 0.1조원	저신용자
	② 중소기업·자영업자 이자 감면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방역 기간인 2020.3.~2022.3.사이의 중소기업, 자영업자 부채 증가분에 대한 1.5% 이자 지원 	예산: 7.4조원	
	③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정비 감면 지원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임대료 등 고정비대출 및 지원 - (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입법: 자영업자 임대료 지원법 예산: 3조원	1. 가계 2. 자영업자 3. 중소기업
	④ 취약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채이자 감면 프로그램 예산 내에서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 지원 재원 확보 	예산: 1.5조원	
高물가, 에너지 요금 부담 경감	⑤ 에너지 물가지원금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상승 피해계층 중심의 하후상박형 지원 	예산: 7.2조원	소득하위 80% 4,117만명
	⑤-1 소상공인·자영업자 난방비(가스 및 전기요금) 지원 (중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대상 가스요금 및 전기요금 지원 (1안 30만원, 2안 40만원) - (입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 	입법: 소상공인 에너지지원법 행사: 간담회 예산: (1안) 2.03조원 (2안) 2.7조원	소상공인·자영업자 676만 (무점포소매업 제외)

목표	9대 민생 프로그램(상임위)	세부내용 및 추진 방안	대책 ['23 예산]	수혜 대상
	⑤-2 농업 난방비(전기 및 전기요금) 지원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원에 농가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확대 - 육계 추가 난방비 지원 - 농사용 전기료 인상분 차액지원(어업포함) 	997억원 262억원 0.2조원	원예농가 5만호 육계농가 0.3만호 농가 196.4만호
	⑥ 지역화폐 예산 증액 및 제도화 (행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 (발행 의무화, 지원사항 의무화) 	입법: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 예산: 0.7조원	전국민
주거 안정	⑦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국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호당 1.6억~3억의 최대 95%를 출자·용자하는 매입임대사업 10가지를 시행중임 - 2023년도 매입임대예산은 총 6조763억원이며 전년 대비 3조797억원 감액됨 - 미분양 등 매입임대사업 5조원을 추가 집행할 경우, ①기존사업으로는 32,885호 매입가능, ② 「공동주택실거래가지수」(22. 11월) 시가기준으로 서울(40㎡) 12,837호, 수도권(40㎡) 21,053호, 지방(40㎡) 65,790호의 추가매입 가능. 전국 부실·미분양 주택 25%를 구제 효과 	예산: 5조원	무주택자
	⑧ 전세 보증금 이자 지원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이자에 대해서 1.42~2.78% 이차지원 - 23년 예산 지원대상 17.6조원에서 1.4조원 추가 확대(23년 국회예산심의시 2.0조원 기확대) 	예산: 279억원	무주택 저소득층 (전세자금 대출)
	⑨ PF 배드뱅크 설립 (정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분양 및 부실채권 대책 (비은행권 PF 정상화) - 부실기업 정리가 아닌 정상화가 목적 - (입법)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입법: 자산관리 공사법 개정 행사: 세미나 예산: 2조원	1. 중소 건설사 2. 제2금융권 3. 전국민* *금융안정 측면

붙임 2 '과제별(분과별) 책임의원' 신청 현황(총 39명)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책임의원 신청 현황 (2023.3.2.현재)					
no	국회의원	비고	no	국회의원	비고
〈1차〉 총론(3/8)			〈5차〉 소상공인(4/5)		
1	박주민	좌장	1	서영교	좌장
2	김영배	간사(토론)	2	이동주	간사(토론)
3	우원식		3	김경만	
4	민병덕		4	김주영	
5	정태호		5	민병덕	
6	홍기원		6	박주민	
〈2차〉 금융(3/15)			7	윤영덕	
1	박주민	좌장			
2	민병덕	간사(토론)	〈6차〉 노동/고용1-특고(4/12)		
3	김성주		1	이학영	좌장
4	신동근		2	이수진(비)	간사(토론)
5	오기형		3	여기구	
6	양경숙		4	최인호	
7	이동주				
〈3차〉 주거·부동산(3/22)					
1	전혜숙	좌장	〈7차〉 노동/고용2-문화예술(4/19)		
2	조오섭	간사(토론)	1	홍익표	좌장
3	박상혁		2	유정주	간사(토론)
4	서동용		3	김승원	
5	윤준병		4	소병훈	
6	이수진(지)		〈8차〉 노동/고용3-돌봄(4/26)		
7	홍기원		1	남인순	좌장
〈4차〉 중소기업(3/29)			2	최혜영	간사(토론)
1	정태호	좌장	3	권인숙	
2	김경만	간사(토론)	4	서영석	
3	김교홍				
4	김한정				
5	이용빈				
6	이용선				
7	이원욱				
8	이장섭				

부록 2 /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언론보도 현황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언론보도 현황

번호	기사제목	날짜	링크	언론사
1	‘토론에서 입법까지’ 민주,李 제안한 ‘민생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실시	2023-02-15	https://url.kr/iuwoze	메트로
2	민주당, 노동·직능·시민단체와 ‘총선공약’ 만든다	2023-03-07	https://url.kr/qrgwlz	매일노동뉴스
3	민주당 토론회서 비판받은 윤석열 정부 ‘민생정책’	2023-03-08	https://url.kr/re3mx9	시사위크
4	민주당, 8주 연속토론회로 민생대책 쟁점	2023-03-08	https://url.kr/5ql6s9	공공뉴스
5	민주, 8주 연속 토론회 열어 금융·부동산 민생대책 논의	2023-03-08	https://url.kr/y26vek	뉴시스
6	민주당 8주간 ‘민생 회복 프로젝트 연속토론회’ 시작	2023-03-09	https://url.kr/rdhbkq	매일노동뉴스
7	민주 “만기일시상환 주담대, 원리금 상환형 전환 필요”	2023-03-15	https://url.kr/badgot	뉴시스
8	과중·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가계부채 위기 극복 대책, 정태호 의	2023-03-15	https://url.kr/wp7uko	선데이뉴스
9	[영상] 무주택자의 부동산 혼란 극복 방안 기자회견	2023-03-23	https://url.kr/tnl2ds	데일리애포트
10	전세사기 “집이 감옥이 되었고...무덤이 됐어요”	2023-03-26	https://url.kr/qzfw9	창업일보
11	민주당, 중소기업 산업전환 지원 박차	2023-03-29	https://url.kr/neb5ra	참여와 혁신
12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을지로위원회, 민생 회복 프로젝트	2023-03-30	https://url.kr/fbxrte	선데이뉴스
13	민주 “독과점 플랫폼 기업 실태조사 추진, 독과점·남용 행위 규제”	2023-04-05	https://url.kr/j4nrui	뉴시스
14	소상공인의 플랫폼 독과점 폐해 위기 극복 방안 토론회	2023-04-05	https://url.kr/hrwmg4	뉴시스
15	민생회복 프로젝트, 서영교 의원	2023-04-05	https://url.kr/ojem7b	선데이뉴스
16	민주당, 오분류 특수고용직 실태조사하나	2023-04-13	https://url.kr/g7bxv9	매일노동뉴스

번호	기사제목	날짜	링크	언론사
17	[영상] 민주연 ‘민생회복 프로젝트’ 기자회견	2023-04-13	https://url.kr/7x3cck	데일리애팩트
18	창작자 죽이는 문화콘텐츠 불공정 행위...민주당 “공정유통법, 조속히 처리” 약속	2023-04-19	https://url.kr/ckbev6	조선비즈
19	‘문화 콘텐츠 불공정행위 극복 방안’ 토론회 개최 [TF사진관]	2023-04-19	https://url.kr/epsa47	더 팩트
20	프리랜서 중소기업의 문화콘텐츠 불공정행위, 홍익표 의원. 유정주 의원	2023-04-20	https://url.kr/l4tobs	선데이뉴스
21	[영상] 민주연 ‘민생회복 프로젝트’ 기자회견	2023-04-20	https://url.kr/6eiw7a	데일리애팩트
22	돌봄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2023-04-26	https://url.kr/sirwh1	동아경제
23	돌봄노동자 고용불안 위기 극복 대책, 박주민, 최혜영 의원	2023-04-27	https://url.kr/b7e14c	선데이뉴스

민주연구원·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가 선정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
- 발간일 2023년 5월 30일
 - 발행인 **정태호** 민주연구원 원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 편집인 **이연희** 민주연구원 상근부원장
 - 편 집 민주연구원 정책네트워크실(**고영국, 박상희, 박정식**)
을지로위원회(**김인아, 서지원, 이원정**)
 - 발행처 민주연구원
-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38대 「민생회복 정책·입법과제」
제안서
